

#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ASEAN

권 율 · 정재완 · 이재호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ASEAN**

KIEP 중장기통상전략연구 07-04

#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 ASEAN |

권 율 · 정재완 · 이재호

.....

## 서 언

그동안 ASEAN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와 역내 분업 촉진에 목적을 두고, ASEAN 자유무역지대(AFTA)를 강화·발전시켜 왔습니다. ASEAN은 외환위기 이후 관세인하 계획을 앞당기는 등 역내 경제통합을 가속화하면서 인구 약 6억 명, GDP 1조 달러 규모의 단일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ASEAN은 한국의 5대 교역지역이자 3대 투자지역으로서 경제적인 긴밀성이 높고, 석유·천연가스 등 주요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원공급원으로서도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말라카 해협으로 이어지는 동남아 인근연안은 아·중동지역으로부터의 자원 수입 등 우리의 석유자원 공급루트에 위치해 있으므로 외교·안보적 차원에서 ASEAN과의 우호 협력관계 유지는 필수적입니다.

또한 최근 수년 간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 간에 동아시아 지역통합 및 경제협력 주도권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ASEAN은 아시아 각국과의 중층적인 협력구도를 통해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ASEAN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경쟁력 및 영향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한국의 대(對)ASEAN 중장기 통상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ASEAN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및 통상외교 강화라는 대ASEAN 통상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ASEAN 협력 사업의 효율적 조정과 관리, 한·ASEAN 산업협력기반 확대, 비관세장벽 철폐, 저개발국에 대한 개발협력 강화 등과 같은 다양한 범주의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본원이 다년차 과제로 진행 중인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원에서는 2006년에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보고서 시리즈를 출간한

바 있습니다. 2007년에는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의 국별·지역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에 대한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을 다루는 총괄보고서와 함께, 국별·지역별로 출간되는 12개의 보고서 중 ASEAN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본원의 권 올 연구위원, 정재완 전문연구원, 이재호 연구원이 작성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담당한 연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보고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많은 건설적인 의견을 주신 외교안보연구원 배극찬 교수, 외교통상부 정진호 서기관, 한국수출입은행 손승호 부부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홍중 박사를 비롯하여 동 보고서의 편집을 담당한 김수월 주임 연구조원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 보고서는 향후 전개될 ASEAN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통합 움직임에 대비하여 ASEAN과의 전략적인 파트너십 형성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각종 추진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이 향후 정부의 정책 제안과 수립 과정에 반영되고 아울러 정부의 ASEAN 통상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7년 12월  
원장 이 경 태

.....

## 국문요약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남아국가연합(ASEAN)은 단일시장을 목표로 경제통합을 추진하면서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현재 ASEAN은 역내 경제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괄적 무역자유화 조치로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외에도 ASEAN 투자자유지역(AIA), ASEAN 산업협력(AICO), 지식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ASEAN은 급속한 경제회복을 배경으로 현재 총인구 5억 7,400만 명과 GDP 1조 달러를 보유한 유망 신흥시장으로서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ASEAN은 또한 한국의 5대 교역지역, 2대 건설수주지역, 3대 투자지역으로서 경제적인 긴밀성이 높다. 또한 석유, 천연가스, 고무, 목재 등 주요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인 자원공급원으로서도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특히 최근 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과 ASEAN+1 차원의 FTA 추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한·ASEAN FTA는 한국이 동아시아 역내 지역통합 구도에 안착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최근 수년 간 ASEAN을 중심으로 한 주요국과의 FTA 및 동아시아 지역통합 및 경제협력 구도에서 중국의 급부상과 일본, 인도, 호주 등의 적극적인 견제로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ASEAN은 ASEAN+1, ASEAN+3, ASEAN+6 등 ASEAN 중심의 중층적인 협력구도를 기반으로 각국과의 FTA를 신속히 추진하면서 동아시아 시장통합 및 경제협력 구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같이 동아시아 지역통합 및 경제협력의 주도권 경쟁에서 전략적 허브로서 ASEAN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ASEAN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한·ASEAN 중장기 통상전략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는 대(對)ASEAN 협력사업의 효율적·전략적 운용체계 구축, 산업

협력기반 확대, 비관세장벽 철폐, 저개발국 중심의 개발협력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전략들은 향후 한국의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향방을 결정지을 ASEAN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형성 및 통상외교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ASEAN과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산업협력기반 강화를 통해 민간부문의 진출기회 확대와 무역 창출에 역점을 두는, 전략적인 글로벌 통상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중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 역내 FTA가 보다 확산된다면 2010년을 전후로 동아시아 FTA 추진 움직임도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한·ASEAN FTA 등으로 역내 경제통합 움직임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기본토대를 구축한 점을 적극 활용해 ASEAN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보다 심화·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차 례

서 언 .....	5
국문요약 .....	7
제1장 서 론 .....	15
제2장 ASEAN 경제 및 통상 정책 .....	21
1. ASEAN의 최근 경제 동향 .....	23
가. 거시경제 현황 .....	23
나. 산업구조의 변화 .....	27
다. 외국인직접투자 .....	28
2. ASEAN의 통상정책 현황과 전망 .....	31
가. 역내통합 추진 현황 .....	31
나. 역외국·지역과의 경제통합 추진 동향 .....	32
3. ASEAN 경제에 대한 평가 및 대외경제정책 전망 .....	35
가. 성공적인 외환위기 극복과 높은 성장 잠재력 .....	35
나. Post-BRICs의 집합체로서 ASEAN .....	37
다. 대외경제정책 운용 전망 .....	40
제3장 한국과의 경제협력 현황 및 전망 .....	43
1. 교역 .....	45

2. 투자	50
3. 정부간 협력	54
4. 한·ASEAN FTA 추진 현황과 성과	56
가. 추진 경과	56
나. FTA 주요 내용	58
다. 의미 및 평가	59
5. 한·ASEAN 경제협력 전망	60
<b>제4장 ASEAN에 대한 주요국의 전략</b>	<b>63</b>
1. 중국	65
2. 일본	70
3. 인도	74
4. 호주 및 뉴질랜드	81
5. 미국	85
<b>제5장 통상전략 및 분야별 협력 확대방안</b>	<b>91</b>
1. 기본방향	93
가. ASEAN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93
나. 대ASEAN 통상외교 강화	96
2. 중점 추진과제	99
가. ASEAN 협력사업의 효율적 조정과 관리	99
나. 한·ASEAN 산업협력기반 확대	102
다. 비관세장벽의 철폐	105
라. 저개발국에 대한 개발협력 강화	107

제6장 향후 전망 및 과제 .....	111
참고문헌 .....	118
Executive Summary .....	121



## 표 차례

표 2-1.	ASEAN 회원국의 주요 경제지표(2006년 기준)	24
표 2-2.	ASEAN 각국의 연평균 GDP 성장률 추이	24
표 2-3.	ASEAN의 주요 교역국(2006년)	25
표 2-4.	ASEAN의 10대 교역 품목(2006년)	26
표 2-5.	DAC의 대ASEAN 국별 ODA 지원실적	27
표 2-6.	ASEAN의 GDP 대비 산업별 비중	28
표 2-7.	국별 FDI 유입량 추이(2004~06년)	29
표 2-8.	주요 투자국별 대ASEAN FDI 추이(2004~05년)	30
표 2-9.	국별 FDI 성과 및 잠재력 지수 매트릭스	30
표 2-10.	동남아의 역내의 FTA 추진 동향(2007년 7월 현재)	33
표 2-11.	Post-BRICs(Next-11, TVT)의 주요 경제지표(2006년)	38
표 2-12.	ASEAN 10개국 주요 경제 지표 전망(2007~30년)	39
표 3-1.	한국의 대ASEAN 교역 추이(1995~2006년)	45
표 3-2.	한국의 대ASEAN 각국별 교역 추이(1995~2006년)	46
표 3-3.	한국의 대ASEAN 품목별 교역구조 추이(금액 및 MTI 1단위 기준)	47
표 3-4.	한국의 대ASEAN 품목별 교역구조 추이(비중기준)	48
표 3-5.	한국의 대ASEAN 10대 수출품목 추이(MTI 3단위 기준)	49
표 3-6.	한국의 대ASEAN 10대 수입품목 추이(MTI 3단위 기준)	49
표 3-7.	한국의 대ASEAN 직접투자 추이	50
표 3-8.	한국의 대ASEAN 국별 직접투자 추이(투자 기준)	51
표 3-9.	한국의 대ASEAN 업종별 직접투자 구조(~2006년)	52

표 3-10. 한국의 대ASEAN 제조업종별 직접투자 구조(~2006년) .....	53
표 3-11. ASEAN의 대한국 직접투자 추이(허가 기준) .....	54
표 3-12. 한국의 대ASEAN 국별 무상원조 지원실적(1996~2006년) .....	55
표 3-13. 한국의 ASEAN 국가에 대한 EDCF 지원 현황(누계, 2006년) .....	55
표 5-1. 아시아 역내 협력구도와 FTA 추진 현황 .....	94
표 5-2. ASEAN의 비관세장벽 현황(2004년, 1,859개 품목) .....	106
표 5-3. 동남아 주요국의 빈곤과 인구관련 주요 지표 비교 .....	108

.....

## 그림 차례

그림 2-1. ASEAN 10개국의 실질 GDP 성장률 추이(1995~2006년) .....	36
그림 2-2. 국가별 GES(Growth Environment Score) 수치 .....	37
그림 3-1. 한·ASEAN FTA 협정 구성 .....	57
그림 3-2. 한국과 ASEAN의 GDP 성장률과 대ASEAN 수출입·투자 추이 .....	61

.....

## 글 상자

글상자 3-1. 한·ASEAN FTA 추진 주요 일정 .....	56
-------------------------------------	----

# 제1장 서론



# 01

## 서론

금융위기 이후 동남아국가들의 경제력이 취약해짐에 따라 동남아국가연합(ASEAN) 경제통합 노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급속히 확산된 바 있다. 그러나 ASEAN은 동남아 단일시장을 목표로 경제통합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1995년 베트남의 ASEAN 가입 이후 미얀마, 라오스, 그리고 1999년 캄보디아의 가입에 따라 동남아 10개국 모두 ASEAN 회원국이 되어 ‘ASEAN 10’이 실현되었다.

현재 ASEAN은 경제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포괄적 무역자유화 조치로서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 외에도 ASEAN 투자자유지역(AIA), ASEAN 산업협력(AICO), 지적재산권 보호, 규격·기준의 상호 인증, 관세협력 등 역내 경제통합을 심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ASEAN 시장통합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중국, 일본 등은 자유무역지대 추진을 포함한 동남아와의 경제협력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ASEAN+3(한·중·일) 협력체제가 강화되면서 동아시아 역내에서 금융 협력, 무역·투자 협력, 산업 협력 등 다방면에 걸친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01년 중국이 ASEAN과 2010년까지 중·ASEAN 자유무역지대(CAFTA)를 창설하기로 공식 합의함에 따라 ASEAN+1 차원의 경제통합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일본은 2002년 초 싱가포르와 FTA 협정을 체결한 이후 ASEAN과

의 포괄적 경제 제후라는 구상을 통해 동남아경제권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과도 양자 FTA를 체결하였다.

우리나라도 2003년 한·ASEAN 정상회의의 합의에 따라 한·ASEAN FTA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한·ASEAN 대화관계 개시 15주년을 맞이하여 2004년 11월 한·ASEAN 정상회의에서 「한·ASEAN 포괄적 협력관계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이후 한·ASEAN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2005년 12월 한·ASEAN 정상회의에서는 기본협정 및 분쟁해결제도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5월에는 한·ASEAN 경제장관회담에서 FTA 상품무역협정을 공식 서명하였고,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은 국내비준을 마치고 2007년 6월 발효되었다. 또한 2007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한·ASEAN 정상회의 직후 한·ASEAN FTA 서비스무역협정에 서명하였다.

ASEAN은 현재 한국의 5대 교역국, 2대 건설수주국, 3대 투자지역으로서 경제적인 긴밀성이 높고, 석유, 천연가스, 고무, 목재 등 주요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인 자원공급원으로서도 중요성이 매우 크다. 특히 최근 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ASEAN+1 차원의 FTA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ASEAN과의 FTA 추진은 한국이 동아시아 역내 지역통합 구도에 안착하게 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물론 일본, 인도, 호주 및 뉴질랜드 등이 경쟁적으로 ASEAN에 대한 접근전략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한·ASEAN FTA 추진은 향후 역내 협력체제 구축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현재 중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 역내 FTA가 보다 확산될 경우 2010년을 전후로 동아시아 FTA 추진 움직임이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므로, 한·ASEAN FTA 추진은 우리나라가 역내 경제통합 움직임에 보다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ASEAN을 중심축으로 아시아 지역통합에 지각변동이 일어나면서 2006년 12월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가 개최된 바 있다.

중국과 일본의 치열한 외교전 속에서 ASEAN은 2005년 4월 세부에서 개최된 ASEAN 비공식 외무장관회담에서 인도는 물론 호주와 뉴질랜드를 신규 참여국으로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인도는 물론 호주, 뉴질랜드를 새로운 참여국이 됨으로써 ASEAN+6 협력체제가 구축됨은 물론, 아시아 지역주의의 새로운 지형이 열리게 되었다. 제9차 ASEAN+3 정상회의와 병행하여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ASEAN을 포함한 16개국 정상이 참여하여 역내 공동관심사와 향후 아시아 지역협력 질서 구축방안에 대한 폭넓은 협의를 갖고, 「칼라룸푸르 선언」을 공동합의문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ASEAN이 의장국을 수입하여 ASEAN 정상회의에 맞추어 연이어 개최할 것임에 합의하였는데, 이는 당초 예상했던 ASEAN+3를 토대로 ‘확대 ASEAN+3 정상회의’가 아닌, ASEAN을 중심으로 한 ASEAN+6 차원의 협력체제라는 것을 밝히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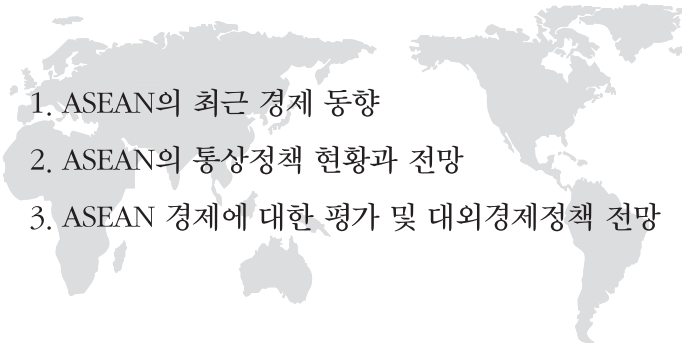
이와 같이 ASEAN은 단합과 결속력을 바탕으로 ASEAN+1, ASEAN+3, ASEAN+6라는 ASEAN 중심의 중층적 지역협력구도를 관철시켜 나가면서 아시아 지역주의의 새로운 판도를 만들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ASEAN+3 협력체제와 큰 차별성이 없고, 지역안보문제에서 ASEAN 지역안보포럼(ARF)과 큰 차별성을 갖지 못하여 EAS만의 독자적 영역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의 상호견제와 힘겨루기를 적절히 활용, 논란과 진통을 거듭한 끝에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운영방안에 대한 ASEAN의 주도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ASEAN의 위상과 역할이 한층 강화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ASEAN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인 통상전략을 수립하여 역내 경제통합은 물론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기반을 강화하는 데 보다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ASEAN 경제의 잠재력과 중장기 전망을 통해 한·ASEAN 협력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최근 ASEAN을 매개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통합

흐름 속에서 동남아 지역경제권과 중장기 통상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주요 과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자 한다.

## 제2장

# ASEAN 경제 및 통상 정책



1. ASEAN의 최근 경제 동향
2. ASEAN의 통상정책 현황과 전망
3. ASEAN 경제에 대한 평가 및 대외경제정책 전망

## ASEAN 경제 및 통상 정책

### 1. ASEAN의 최근 경제 동향

#### 가. 거시경제 현황

ASEAN은 1980~90년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7~8%에 달하는 고도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총인구 약 5억 명, 국내총생산(GDP) 약 1조 달러 규모의 동아시아 내 대표적인 신흥시장(Emerging Market)으로 급성장하였다. 이러한 ASEAN 지역 급성장의 주된 동력으로는 저임금과 풍부한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한 수출주도형 개발정책과 외국인투자 증가, 그리고 정부주도의 무역 및 투자 활성화 정책을 들 수 있다.

ASEAN 국가들은 1980~90년대 급성장한 후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고도성장의 기세가 꺾이는 듯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대부분 ASEAN 회원국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회복하면서 성공적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수년간 쓰나미로 인한 지진해일 피해, SARS(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ASEAN 회원국 대부분이 5%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개혁·개방 정책으로 외국인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8%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하며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 표 2-1. ASEAN 회원국의 주요 경제지표(2006년 기준) ▮

구분	인구	GDP	1인당 GDP	물가 상승률	수출	수입	수출입액	무역수지	FDI
단위	천명	백만 달러	달러	%	백만 달러	백만 달러	백만 달러	백만 달러	백만 달러
인도네시아	222,051.0	364,288.0	1,640.6	6.6	103,964.1	78,392.7	182,356.8	25,571.3	6,107.3
필리핀	86,910.3	117,131.8	1,347.7	4.3	47,037.0	51,523.0	98,560.0	-4,486.0	1,132.5
태국	65,233.0	206,552.1	3,166.4	3.5	129,948.5	126,848.5	256,797.0	3,100.0	4,007.8
말레이시아	26,686.2	149,728.9	5,610.7	4.6	161,248.7	131,720.1	292,968.8	29,528.6	3,964.8
싱가포르	4,483.9	132,273.4	29,499.6	0.8	271,601.0	238,503.0	510,104.0	33,098.0	20,080.5
브루나이	383.0	11,845.7	30,928.8	0.5 <sup>1)</sup>	5,768.7	1,028.7	6,797.4	4,740.0	288.5
<b>ASEAN 6</b>	<b>405,747.4</b>	<b>981,819.8</b>	<b>2,419.8</b>	<b>3.4</b>	<b>719,568.0</b>	<b>628,016.0</b>	<b>1,347,584.0</b>	<b>91,552.0</b>	<b>35,581.4</b>
베트남	84,221.9	60,965.2	723.9	6.6	39,605.0	44,410.0	84,015.0	-4,805.0	2,020.8
캄보디아	13,996.2	6,105.2	436.2	2.8	2,602.4	2,147.0	4,749.4	455.4	381.2
라오스	6,135.3	3,510.1	572.1	4.7	254.7	423.6	678.3	-168.9	27.7
미얀마	57,289.1	11,951.0	208.6	12.1 <sup>1)</sup>	3,514.8	2,115.5	5,630.3	1,399.3	71.8
<b>CLMV</b>	<b>161,642.6</b>	<b>82,531.5</b>	<b>510.6</b>	<b>6.5</b>	<b>45,976.8</b>	<b>49,096.1</b>	<b>95,072.9</b>	<b>-3,119.3</b>	<b>2,501.5</b>
<b>ASEAN</b>	<b>567,390.0</b>	<b>1,064,351.3</b>	<b>1,875.9</b>	<b>4.6</b>	<b>765,544.8</b>	<b>677,112.1</b>	<b>1,442,656.9</b>	<b>88,432.7</b>	<b>38,082.9</b>

주: 1) Global Insight([www.globalinsight.com](http://www.globalinsight.com)).

자료: ASEAN Secretariat.

▮ 표 2-2. ASEAN 각국의 연평균 GDP 성장률 추이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망	2008년 전망
ASEAN	4.8	5.3	6.5	5.6	6.0	5.6	5.9
인도네시아	4.5	4.8	5.0	5.7	5.5	6.0	6.3
필리핀	4.4	4.9	6.2	5.0	5.4	5.4	5.7
태국	5.3	7.1	6.3	4.5	5.0	4.0	5.0
말레이시아	4.4	5.5	7.2	5.2	5.9	5.4	5.7
싱가포르	4.2	3.1	8.8	6.6	7.9	6.0	5.5
브루나이 <sup>1)</sup>	3.9	2.9	0.5	0.4	3.5	2.3	2.0
베트남	7.1	7.3	7.8	8.4	8.2	8.3	8.5
캄보디아	6.2	8.6	10.0	13.4	10.4	9.5	9.0
라오스	5.9	6.1	6.4	7.0	7.3	6.8	6.5
미얀마 <sup>1)</sup>	12.0	13.8	13.6	12.2	7.1	5.3	5.3

주: 1) Global Insight([www.globalinsight.com](http://www.globalinsight.com)).

자료: Asian Development Bank.

ASEAN의 주요 교역국은 일본, 미국, EU순이며 1980~90년대 일본을 비롯한 구미 선진국 기업들의 ASEAN 현지투자 진출로 인한 중간재 수출입으로 인해 전자 및 기계류 교역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 ASEAN이 선진국 기업들의 원가절감을 위한 수출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해왔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최근 ASEAN이 추진 중인 다수의 FTA로 인해 ASEAN산 제품들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되어 세계시장에서 한국산 제품과의 가격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3. ASEAN의 주요 교역국(2006년) ▮

(단위: 백만 달러, %)

국 가	수 출		수 입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ASEAN	189,176.8	25.2	163,594.5	25.0
일 본	81,284.9	10.8	80,495.6	12.3
미 국	96,943.5	12.9	64,252.5	9.8
E U	94,471.8	12.6	66,118.1	10.1
중 국	65,010.3	8.7	74,950.9	11.5
한 국	25,670.0	3.4	26,849.7	4.1
호 주	23,148.5	3.1	13,262.8	2.0
인 도	18,928.1	2.5	9,774.6	1.5
캐나다	3,916.4	0.5	2,970.3	0.5
뉴질랜드	3,018.6	0.4	1,531.2	0.2
러시아	1,583.0	0.2	2,841.1	0.4
파키스탄	2,986.2	0.4	296.1	0.0
기 타	144,569.6	19.3	147,160.4	22.5
총 계	750,707.8	100.0	654,097.8	100.0

자료: ASEAN Secretariat.

표 2-4. ASEAN의 10대 교역 품목(2006년) |

(단위: 십억 달러)

순 위	HS- Code	품목명	수출입			% / ASEAN 총교역량		
			수출	수입	교역량	수출	수입	교역량
1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206,8	180,7	387,5	27,6	27,6	27,6
2	27	광물성연료·광물유·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107,0	117,1	224,1	14,3	17,9	16,0
3	84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117,7	94,1	211,7	15,7	14,4	15,1
4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20,6	17,7	38,3	2,7	2,7	2,7
5	29	유기화학품	20,9	15,2	36,1	2,8	2,3	2,6
6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17,0	16,2	33,3	2,3	2,5	2,4
7	90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14,3	15,9	30,2	1,9	2,4	2,1
8	72	철강	6,2	20,1	26,3	0,8	3,1	1,9
9	40	고무와 그 제품	21,2	5,1	26,3	2,8	0,8	1,9
10	71	진주, 귀석, 반귀석, 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9,6	10,3	19,8	1,3	1,6	1,4
기 타			209,3	161,8	371,1	27,9	24,7	26,4
총 계			750,7	654,1	1,404,8	100	100	100

자료: ASEAN Secretariat.

외국인직접투자와 함께 공적개발원조(ODA)는 동남아 경제발전에 상당히 기여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ODA는 동남아의 각종 경제하부구조를 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핵심 전략 수립이나 인적자원 육성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동남아 ODA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지원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원대상국이 바뀌었다. 주요 수원국이었던 태국, 말레이시아 등이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최빈개도국의 지위를 벗어남에 따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많은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2005년의 경우 DAC 회원국의 동남아 지원중 3/4 가량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집중되고 있다. 반면 태국은 2000년대 들어 지원받는 금액보다 상환하는 금액이 더 많아지고 있다.

표 2-5. DAC의 대ASEAN 국별 ODA 지원실적

(단위: 백만 달러)

국 명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1~05년
인도네시아	1,345.16	1,162.00	1,550.66	-146.29	2,247.20	6,158.73
베트남	819.52	746.04	967.70	1,184.80	1,252.12	4,970.18
필리핀	501.78	509.14	703.82	433.15	526.40	2,674.29
캄보디아	264.83	272.75	319.20	297.41	344.43	1,498.62
라오스	151.02	177.81	188.81	177.80	159.02	854.46
말레이시아	24.88	85.40	104.47	286.95	20.05	521.75
미얀마	89.16	79.14	83.42	81.50	77.83	411.05
태 국	270.85	279.58	-984.43	-23.65	-219.85	-677.50
총 계	3,467.20	3,311.86	2,933.65	2,291.67	4,407.20	16,411.58

주: 1) 상기 금액은 DAC 회원국의 지원금에 한함(싱가포르와 브루나이는 제외).

2) 2001~05년 누계금액 순임.

자료: OECD(www.oecd.org).

## 나. 산업구조의 변화

ASEAN 10개국 중 ASEAN 6(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는 제조업 중심의 2차산업과 관광·서비스 중심의 3차산업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sup>1)</sup> 반면 전통적으로 농업 비중이 높은 CLMV 국가 중 미얀마와 라오스의 경우 여전히 농업이 GDP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최근 고도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점차 1차산업에서 2·3차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ASEAN의 저임금과 자원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 중심의 2차산업은 점차 중국과의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금융·서비스·IT 등 3차산업도 그 발전 정도가 아직 미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도약을 위한 산업구조의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1) ASEAN의 산업정책과 공업화에 따른 구조전환에 대해서는 권 올(2002) 참고.

를 중심으로 IT 산업, 의료관광, 은퇴이민 유치 등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필리핀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바탕으로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및 은퇴이민산업이 급성장하여 차세대 유망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 표 2-6. ASEAN의 GDP 대비 산업별 비중 ▣

(단위: %)

국 명		2000년			2005년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A S E A N 6	인도네시아	15.6	45.9	38.5	13.4	45.8	40.8
	필리핀	15.8	32.3	52.0	14.4	32.6	53.0
	태 국	9.0	42.0	49.0	9.9	44.1	46.0
	말레이시아	8.4	48.4	43.1	8.4	49.8	41.8
	싱가포르	0.1	33.5	66.4	0.1	32.5	67.4
	브루나이	2.7	47.8	49.5	3.6	48.3	48.1
C L	베트남	24.5	36.7	38.7	20.9	41.0	38.1
	캄보디아	37.9	23.0	39.1	32.9	29.2	37.9
M V	미얀마	57.2	9.7	33.1	50.6	14.3	35.1
	라오스	52.6	22.9	24.6	47.0	27.3	25.7

자료: Asian Development Bank.

#### 다. 외국인직접투자

ASEAN 지역은 동아시아 외환위기, 2000~01년 세계경제 약세, 2003년 SARS 발생, 2004년 쓰나미 발생 등 각종 악재를 거치면서도 아시아의 대표적 인 투자대상지역으로 손꼽혀 왔다. ASEAN 지역은 전통적으로 저비용을 노린 선진국 제조업 기업들의 우회 생산기지 건설이 중심이었으나, 최근 ASEAN 국가들의 경제성장 및 구매력 상승으로 현지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도 경쟁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전통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제일 높은데, 이는 1980~

90년대 선진국 기업들의 비용절감을 위한 우회 생산기지 진출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요 교역품목인 전기·전자, 기계, 철강 등 중간재 수출입의 상당 부분이 선진국 기업들의 ASEAN 현지생산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ASEAN 지역의 최근 국별 FDI 유입량은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순이며, 싱가포르의 꾸준한 FDI 증가 외에도 중국과 함께 고도 경제성장 중인 베트남과 캄보디아로의 FDI 유입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며 CLMV 국가들의 투자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

표 2-7. 국별 FDI 유입량 추이(2004~06년)

(단위: 백만 달러)

국가명	2004년		2005년		2006년		2004~06년 누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싱가포르	19,827.5	56.5	15,001.9	36.5	24,055.4	45.9	58,884.80	45.8
태국	5,862.0	16.7	8,957.0	21.8	10,756.1	20.5	25,575.06	19.9
인도네시아	1,894.5	5.4	8,336.0	20.3	5,556.2	10.6	15,786.72	12.3
말레이시아	4,623.9	13.2	3,964.8	9.7	6,059.7	11.6	14,648.41	11.4
필리핀	687.8	2.0	1,854.0	4.5	2,345.0	4.5	4,886.81	3.8
브루나이	212.0	0.6	288.5	0.7	433.5	0.8	934.05	0.7
ASEAN 6	33,107.7	94.3	38,402.2	93.5	49,205.9	93.9	120,715.9	93.9
베트남	1,610.1	4.6	2,020.8	4.9	2,360.0	4.5	5,990.91	4.7
캄보디아	131.4	0.4	381.2	0.9	483.2	0.9	995.84	0.8
미얀마	251.1	0.7	235.9	0.6	143.0	0.3	629.94	0.5
라오스	16.9	0.0	27.7	0.1	187.4	0.4	232.06	0.2
CLMV	2,009.5	5.7	2,665.6	6.5	3,173.6	6.1	7,848.8	6.1
ASEAN	35,117.2	100.0	41,067.8	100.0	52,379.5	100.0	128,564.61	100.0

주: 순위는 2004~06년 누계금액 순임.

자료: ASEAN Secretariat.

대ASEAN 투자는 EU, 일본, 미국 순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일본이 단일국가로는 최대 투자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형태로 ASEAN 각국과의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일본의 대ASEAN 투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8. 주요 투자국별 대ASEAN FDI 추이(2004~05년) ▮

순위	국명	2004년		2005년		2006년		2004~06년 누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EU	10,046.1	28.6	11,139.6	27.1	13,361.9	25.5	44,955.6	26.3
2	일본	5,732.1	16.3	7,234.8	17.6	10,803.3	20.6	30,813.7	18.0
3	미국	5,232.4	14.9	3,010.6	7.3	3,864.9	7.4	13,736.1	8.0
4	ASEAN	2,803.7	8.0	3,765.1	9.2	6,242.1	11.9	19,377.7	11.3
5	한국	806.4	2.3	577.7	1.4	1,099.1	2.1	3,347.3	2.0
6	중국	731.5	2.1	502.1	1.2	936.9	1.8	2,302.9	1.3
7	호주	566.7	1.6	195.9	0.5	399.2	0.8	1,444.3	0.8
8	캐나다	301.2	0.9	161.3	0.4	274.0	0.5	1,184.9	0.7
9	뉴질랜드	3.5	0.0	480.7	1.2	-282.8	-0.5	392.1	0.2
10	인도	118.7	0.3	351.7	0.9	-380.4	-0.7	295.1	0.2
	기타	8,770.1	25.0	13,644.9	33.2	16,047.9	30.6	52,955.4	31.0
	총계	35,112.5	100.0	41,064.4	100.0	52,366.1	100.0	170,805.0	100.0

주: 순위는 2004~06년 누계금액 순위.

자료: ASEAN Secretariat.

표 2-9. 국별 FDI 성과 및 잠재력 지수 매트릭스 ▮

	High FDI Performance	Low FDI Performance
	Front-runners	Below-potential
High FDI Potential	Azerbaijan, Bahamas, Bahrain, Belgium, Botswana, <b>Brunei Darussalam</b> , Bulgaria, Chile, Chin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ominican Republic, Estonia, Hong Kong (China), Hungary, Iceland, Israel, Jordan, Kazakhstan, Latvia, Lithuania, Luxembourg, <b>Malaysia</b> , Malta, Netherlands, Panama, Poland, Portugal, Qatar, <b>Singapore</b> , Slovakia, <b>Thailand</b> , Trinidad and Tobago, Ukraine, United Arab Emirates and United Kingdom	Algeria, Argentina, Australia, Austria, Belarus, Brazil, Canada,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Ireland, Islamic Republic of Iran, Italy, Japan, Kuwait, Libyan Arab Jamahiriya, Mexico, New Zealand, Norway, Oman, Republic of Korea, Russian Federation, Saudi Arabia,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aiwan Province of China, Tunisia, Turkey, United States and Venezuela.
	Above-potential	Under-performers
Low FDI Potential	Albania, Angola, Armenia, Colombia, Congo, Costa Rica, Ecuador, Egypt, Ethiopia, Gabon, Gambia, Georgia, Guyana, Honduras, Jamaica, Kyrgyzstan, Lebanon, Mali, Mongolia, Morocco, Mozambique, Namibia, Nicaragua, Republic of Moldova, Romania, Sierra Leone, Sudan, Suriname, Tajikistan, Uganda, United Republic of Tanzania, Uruguay, <b>Viet Nam</b> , Zambia.	Bangladesh, Benin, Bolivia, Burkina Faso, Cameroon,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CÔ'Ivoire, El Salvador, Ghana, Guatemala, Guinea, Haiti, India, <b>Indonesia</b> , Kenya, TFY Rep. of Macedonia, Madagascar, Malawi, <b>Myanmar</b> , Nepal, Niger, Nigeria, Pakistan, Papua New Guinea, Paraguay, Peru, <b>Philippines</b> , Rwanda, Senegal, South Africa, Sri Lanka, Syrian Arab Republic, Togo, Uzbekistan, Yemen and Zimbabwe.

자료: UNCTAD.

UNCTAD가 조사한 ASEAN 국가들에 대한 FDI 성과지수(FDI Performance Index)와 FDI 잠재력지수(FDI Potential Index)를 살펴보면,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은 FDI 성과지수 및 잠재력지수 모두가 높은 Front-Runner 그룹에 속해 비교적 투자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반면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은 두 지수 모두 낮은 Under-Performer 그룹에 속해 투자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ASEAN의 통상정책 현황과 전망

### 가. 역내통합 추진 현황

#### 1) ASEAN의 정치·안보 협력

ASEAN의 설립 시기인 1960년대는 필리핀-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사이의 영유권 분쟁과 강대국들의 이념 갈등으로 인한 정세 불안정이 동남아시아 일대의 사회·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던 시기로, 국제정세 급변에 따른 공동대응을 통한 안보확립의 필요성에 따라 ASEAN 설립이 추진되었다. 이후 1971년 동남아 평화·자유 및 중립지대 선언(ZOPFAN), 1976년 ASEAN 협력선언 I, 동남아 우호협력조약(TAC) 체결 및 ASEAN 사무국 설치, 1993년 ASEAN 지역포럼(ARF) 창설, 1995년 동남아 비핵지대화 조약(SEANWFZ) 체결, 1997년 ASEAN Vision 2020 채택, 2007년 ASEAN 헌장서명 등 ASEAN은 다양한 형태의 역내통합을 시도하여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기구로서의 형태를 갖추어 가며 역내통합과 공동번영 및 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ASEAN 설립시기인 1960년대와 오늘날 ASEAN 통합의 성격은 시대적 차이를 보이는데, 1960년대 ASEAN이 정치적 중립과 안보확립의 성격을 띤 반면,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역내 공동체 구성과 더 나아가 동아시아 협력체에서의 주도적 역할 수행에 그 방향을 맞추고 있다.

## 2) ASEAN 역내 경제통합 가속화

1967년 설립 당시 ASEAN의 주된 설립취지는 이념갈등으로 인한 불안 해소와 지역안보 확립이었던 반면, 1990년대부터는 회원국 및 주변국과의 대화관계 활성화를 통한 경제협력체 구성의 의미가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1990년대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 및 지역주의 등장으로 인한 국제정세 변화로 인해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거대경제권역으로의 통합을 시작하게 되었다. 1993년 AFTA 출범, ASEAN+3, GMS-EC(Great Mekong Subregion Economic Cooperation), IAI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ASEAN 경제장관회의(ASEAN Economic Ministers, ASEM) 등 다양한 형태로 역내통합과 경제협력을 시도하면서 ASEAN이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경제통합체로서 자리잡았다.

2007년 11월 ASEAN 10개 회원국은 ASEAN 창설 40주년 정상회담에서 ASEAN 헌장을 채택해 ASEAN의 법적 ·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고, 2015년까지 교역, 서비스, 투자, 금융, 인력 등에 걸쳐 공동체를 구성하는 ASEAN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를 설립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단일경제권역으로서의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향후 동아시아 경제협력 구도에서 ASEAN의 영향력을 확대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 나. 역외국 · 지역과의 경제통합 추진 동향

ASEAN은 1993년 AFTA 창설 이후 역내 교역 자율화를 통한 교역 확대를 꾸준히 시도해왔으며, 최근에는 다자간 혹은 양자간의 형태로 다양하게 FTA를 추진하며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먼저 ASEAN은 한국 · 중국 · 일본 · 인도 등과 같은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과 EU 등과도 다자간 FTA를 추진 중이다.

또한 ASEAN 전체를 통한 다자간 FTA뿐만 아니라 국가단위의 양자간 FTA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싱가포르가 23건으로 가장 활발하게

▮ 표 2-10. 동남아의 역내외 FTA 추진 동향(2007년 7월 현재) ▮

F T A		추진 단계				
		협 의	공동연구	교섭	서명	발효
ASEAN	ASEAN FTA(AFTA)					X
	ASEAN-China(CEC)					X
	ASEAN-Korea					X
	ASEAN-Japan(CEP)			X		
	ASEAN-India			X		
	ASEAN-US(EAI)	X				
	ASEAN-CER			X		
	ASEAN+3		X			
	ASEAN-EU		X			
Singapore	Singapore-New Zealand					X
	Singapore-US <sup>1)</sup>					X
	Singapore-EFTA <sup>2)</sup>					X
	Singapore-Japan(EPA)					X
	Singapore-Australia					X
	Singapore-Jordan					X
	Singapore-Korea					X
	Singapore-India(CECA)					X
	Singapore-Bahrain		X			
	Singapore-Canada			X		
	Singapore-Egypt			X		
	Singapore-Mexico			X		
	Trans-Pacific Strategic EPA <sup>3)</sup>					X
	Singapore-Panama					X
	Singapore-Peru			X		
	Singapore-Sri Lanka(CEPA)		X			
	Singapore-Kuwait			X		
	Singapore-Qatar			X		
	Singapore-UAE		X			
	Singapore-Taiwan	X				
Singapore-Pakistan			X			
Singapore-Saudi Arabia	X					
	Singapore-China			X		
Brunei	Trans-Pacific Strategic EPA					X
	Brunei-Japan			X		
	Brunei-US		X			

표 2-10. 계속

F T A		추진 단계				
		협 의	공동연구	교섭	서명	발효
Malaysia	Malaysia-China			X		
	Malaysia-Japan					X
	Malaysia-India		X			
	Malaysia-US			X		
	Malaysia-Pakistan			X		
	Malaysia-New Zealand			X		
	Malaysia-Chile		X			
Thailand	Malaysia-Australia			X		
	Thailand-Bahrain			X		
	Thailand-Peru			X		
	Thailand-India			X		
	Thailand-China					X
	Thailand-BIMSTEC <sup>4)</sup>			X		
	Thailand-Australia					X
	Thailand-US <sup>1)</sup>			X		
	Thailand-Japan				X	
	Thailand-Korea		X			
	Thailand-New Zealand					X
	Thailand-EFTA			X		
	Thailand-Laos PTA					X
	Thailand-Pakistan		X			
	Thailand-Chile		X			
Thailand-MERCOSUR		X				
Philippines	Philippines-Pakistan		X			
	Philippines-Japan				X	
Indonesia	Philippines-US <sup>1)</sup>		X			
	Indonesia-Japan			X		
	Indonesia-India		X			
	Indonesia-EU		X			
	Indonesia-Pakistan			X		
Vietnam	Indonesia-US		X			
	Vietnam-Japan			X		
Laos	Laos-Thailand PTA					X
Myanmar	Myanmar-BIMSTEC <sup>4)</sup>			X		

주: 1) 미국과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체결.

2) 스위스,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로 구성.

3)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로 구성된 「범태평양 전략적 경제공동체협약」.

4) 방글라데시, 인도,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네팔, 부탄으로 구성된 경제협력체.

자료: ADB Regional Integration Center 자료 및 각종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FTA를 추진해 왔으며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특히 ASEAN 국가 대부분이 미국·일본과 양자간 FTA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ASEAN에서 미국과 일본이 전통적으로 투자 및 교역 규모 1~2위를 기록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한·미 FTA 타결로 자극받은 아시아 각국이 서둘러 FTA 추진에 나서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2007년 3월 중단되었던 미국과의 FTA 협상을 재개하였고 일본은 2007년 11월 ASEAN과의 CEP(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상을 완료하였다.

향후 FTA를 통한 교역 자율화 및 경제통합의 범위와 속도는 점차 가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이며, FTA 체결로 인한 국별·산업별 구조조정으로 교역구조 변화 및 국가간 분업구조 형성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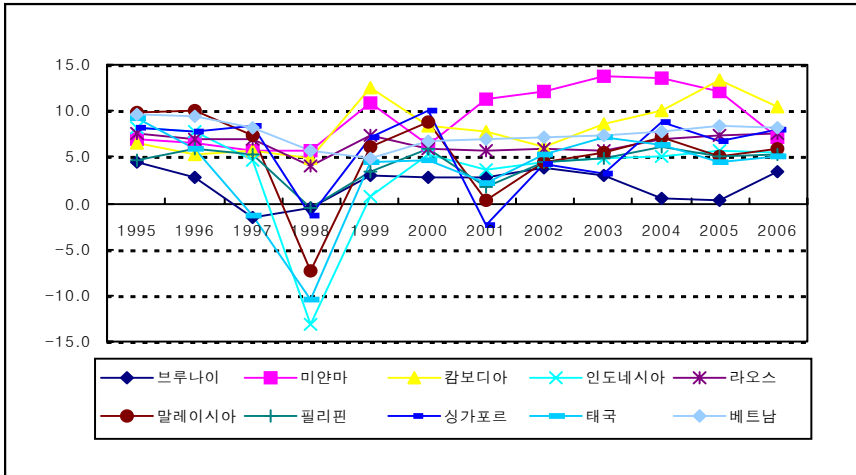
### 3. ASEAN 경제에 대한 평가 및 대외경제정책 전망

#### 가. 성공적인 외환위기 극복과 높은 성장 잠재력

ASEAN은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2001년 세계경기 침체, 2003년 SARS 유행, 2004년 쓰나미 지진해일 피해, 매년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각종 악재로 다소 경제성장세가 둔화되기는 하였지만 2006년 GDP 성장률이 5.8%를 기록하며 비교적 성공적인 경제회복을 달성하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제조업과 농업 관련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에도 불구하고 수년간의 고유가와 2006년 미 달러화 약세 등 악재를 견뎌내면서 2006년 수출이 전년대비 18% 증가를 달성하였다.<sup>2)</sup> 또한 대외 경제통합면에서도 교역자율화와 경제통합이라는 일관적인 경제흐름을 지속적으로 주도하면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중심축으로 부상하였다.

2) ASEAN Secretariat Statistics([www.aseansec.org](http://www.aseansec.org)).

그림 2-1. ASEAN 10개국의 실질 GDP 성장률 추이(1995~2006년)



자료: Global Ins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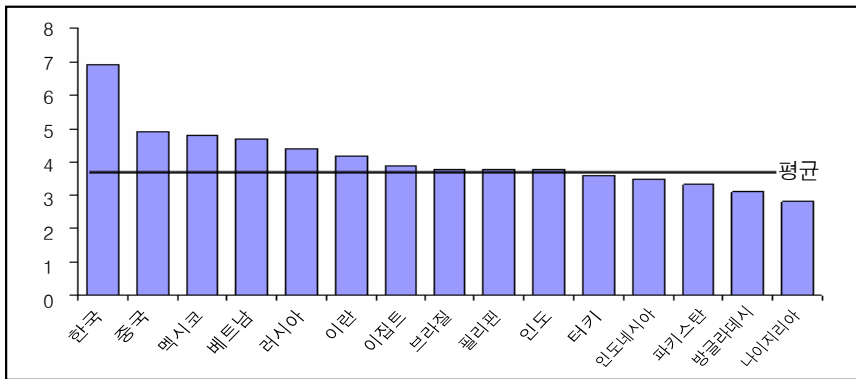
ASEAN 국가들은 수차례 악재를 겪었으나 비교적 단기간에 빠른 경제회복을 이루어 내면서 아시아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중국·인도와 함께 동아시아 주요 경제권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높은 교육열, 풍부한 인력, 적극적 개혁·개방 등으로 성장잠재력을 높게 인정받아 ASEAN 국가들의 경제성장 전망이 밝은 상황이며, 최근 ASEAN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수의 FTA로 인해 향후 교역 확대 및 ASEAN 경제통합을 통한 추가 성장이 예상된다.

다만 향후 ASEAN 경제성장의 관건으로는 ASEAN 6(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와 CLMV의 경제격차 축소, FTA 이후 교역구조 변화, 인프라 확충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전통적으로 ASEAN의 주요 산업이던 제조업에서 중국과의 경쟁으로 ASEAN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어 제조업을 탈피한 차세대 성장산업 마련 또한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 나. Post-BRICs의 집합체로서 ASEAN

2003년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Goldman Sachs)가 BRICs라는 개념을 최초로 내놓으면서 최근 수년간 선진국 투자자들은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과 같은 거대 신흥시장들을 블루오션(Blue Ocean)으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BRICs 국가들은 시장 선점을 노린 선진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에 힘입어 세계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시장으로 부상하였다. 이제는 BRICs 국가들의 시장과열로 블루오션으로서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었고, Post-BRICs 시대의 도래를 예견하는 Next-11(11개 유망 신흥경제), TVT(터키, 베트남, 태국)와 같은 용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그림 2-2. 국가별 GES(Growth Environment Score) 수치



자료: GoldmanSachs(2005), p. 10.

BRICs라는 개념을 최초로 발표한 골드만삭스가 2005년 말 “How Solid are the BRICs?”라는 보고서로 신흥시장 판도 변화를 예측하며 제시한 N-11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골드만삭스가 새롭게 주장한 이 N-11은 각종 거시경제지표와 통신, 교육, 정치안정성 등을 조합해 고안한 GES(Growth Environment Score) 지수를 바탕으로 선정되었으며, 한국을 비롯하여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터키, 베트남, 멕시코와 같은 국가들이 이에 속한다. 골드만삭스는 이 보고서에서 N-11 국가 중 상당수가 2050년까지 G-7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N-11국가들의 성장잠재력을 높게 평가하였다.<sup>3)</sup>

표 2-11. Post-BRICs(Next-11, TVT)의 주요 경제지표(2006년) ▮

국명	인구(백만 명)	GDP(십억 달러)	1인당 GDP	GDP성장률(2001~05년)
인도네시아	225.46	364.46	1,616.48	4.73
필리핀	85.81	116.93	1,362.62	4.45
태국	64.76	206.25	3,184.67	5.06
베트남	85.34	60.47	708.54	7.47
이란	70.69	223.74	3,165.14	5.79
나이지리아	134.96	121.29	898.74	5.66
방글라데시	144.98	60.37	416.41	5.43
파키스탄	156.88	97.65	622.43	5.04
한국	48.68	887.99	18,241.29	4.56
터키	74.17	384.69	5,186.26	4.29
이집트	75.44	107.77	1,428.62	3.70
멕시코	107.37	839.77	7,820.89	1.79

자료: Global Insight.

ASEAN 국가 중에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이 Next-11에 선정되었고 베트남이 GES 지수 상위그룹에 속해 있어,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ASEAN 국가들의 향후 경제전망이 밝음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베트남은 개혁·개방 정책인 ‘도이머이’ 이후 연평균 약 8%의 고도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동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또한 베트남은 골드만삭스의 N-11 이외에도 최근 일본의 오마에 켄이치(大前研一, Ohmae Kenichi)가 차세대 신흥시장으로 지목한 TVT(터키, 베트남, 태국)에도 선정되는 등 유망 신흥시장에서 빠지지 않는 주요 국가로 자리잡았다.

3) GoldmanSachs(2005), p. 8 참고.

▮ 표 2-12. ASEAN 10개국 주요 경제 지표 전망(2007~30년) ▮

국 명	주요 경제지표	단 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20년	2030년
인도네시아	실질GDP성장률	%	5.8	5.5	5.3	5.1	4.3	4.3
	1인당 GDP	달러	1,800	1,935	2,079	2,210	4,235	8,044
	경상수지	백만 달러	5,720	5,409	5,385	5,555	-13,373	-31,816
필리핀	실질GDP성장률	%	4.8	4.7	4.6	4.6	4.8	4.4
	1인당 GDP	달러	1,545	1,600	1,635	1,706	3,302	6,568
	경상수지	백만 달러	5,979	1,062	-78	-1,844	-9,804	-22,188
태 국	실질GDP성장률	%	4.4	5.3	5.2	5.5	4.4	4.4
	1인당 GDP	달러	3,655	4,005	4,375	4,787	9,098	17,817
	경상수지	백만 달러	5,089	5,322	2,713	-300	-6,381	-17,872
말레이시아	실질GDP성장률	%	5.5	5.2	5.3	5.2	4.2	3.5
	1인당 GDP	달러	6,404	6,715	7,069	7,443	11,679	20,218
	경상수지	백만 달러	27,693	28,680	31,250	37,065	10,099	-7,033
싱가포르	실질GDP성장률	%	5.5	5.2	4.6	4.6	4.0	3.5
	1인당 GDP	달러	32,852	35,949	38,933	41,481	67,969	112,078
	경상수지	백만 달러	32,029	34,029	32,380	32,888	43,243	58,250
브루나이	실질GDP성장률	%	2.3	2.0	1.4	1.4	1.7	1.6
	1인당 GDP	달러	29,098	30,453	31,239	31,548	33,491	38,082
	경상수지	백만 달러	-	-	-	-	-	-
베트남	실질GDP성장률	%	8.1	7.9	8.1	7.9	6.4	5.7
	1인당 GDP	달러	791	877	978	1,093	2,595	5,897
	경상수지	백만 달러	-1,674	-1,945	-2,792	-3,702	5,643	13,647
캄보디아	실질GDP성장률	%	9.3	9.5	8.8	8.1	7.1	6.3
	1인당 GDP	달러	570	629	688	746	1,545	3,067
	경상수지	백만 달러	-501	-517	-530	-540	-354	-248
라오스	실질GDP성장률	%	6.8	6.3	7.1	9.4	7.2	6.4
	1인당 GDP	달러	602	646	692	747	1,854	4,023
	경상수지	백만 달러	0	0	0	0	-946	-2,193
미얀마	실질GDP성장률	%	5.3	5.3	5.2	5.1	4.4	3.5
	1인당 GDP	달러	224	245	270	297	568	991
	경상수지	백만 달러	-	-	-	-	-	-

자료: Global Insight.

## 다. 대외경제정책 운용 전망

ASEAN 회원국들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은 국가간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보이나, ASEAN이라는 정체성을 고려했을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적인 경제정책을 전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FTA를 통한 교역확대 및 거대 경제권역으로의 통합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ASEAN 지역은 AFTA를 추진하면서 이미 ASEAN 권역의 통합은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이며, 회원국별로 수적인 차이는 있지만 개별 국가 단위로도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ASEAN의 아시아 주요 국가와의 FTA 추진 현황을 보면, 한국 및 중국과는 FTA 체결을 완료하였고 일본, EU, 인도 등으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한편 역사적 · 정치적인 영향으로 중국, 인도, 일본 등과 같은 아시아 주요 국가 사이의 FTA가 진행 속도가 더디거나 협상이 중단된 것에 비해, ASEAN은 역사적 · 정치적인 관계와 무관하게 아시아 주요국들과 일찌감치 FTA를 추진해왔기 때문에 FTA를 통한 교역 확대효과를 일찍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도 ASEAN은 특유의 개방성을 바탕으로 FTA 체결 대상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체결된 아시아 주요 경제권역과의 FTA를 바탕으로 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신흥시장으로의 ASEAN의 부상에 따라 FDI 정책의 개방성이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BRICs의 부상 이후 중국과 인도는 시장과열로 인한 임금 및 지대 상승으로 투자가치가 하락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투자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ASEAN 국가가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ASEAN 국가 중 일부 CLMV 국가들의 경우 정치적인 문제로 외국인투자가 주변국들에 비해서 낮은 편이었으나, 최근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한 CLMV 국가들도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간혹 태국과 같이 유동성 위기나 전략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인투자를 일부 통제하는 경우도 있으나, 통제범위가 제한적이며 관련조항들이 축소되는 추세로, ASEAN 국가들

은 대체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적인 성향을 점차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향후 ASEAN은 이러한 개방적인 투자유치 정책에 따른 FDI 확대로 국별 혹은 산업별로 분업구도가 확대되면서 국가별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한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특성화된 국가들의 집합체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범 ASEAN 차원의 인프라 개발에 따른 인프라 네트워크 형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도국 경제발전에서 인프라 건설은 대규모 자금투입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경제기반 마련이라는 중요성을 가지나 태국, 말레이시아를 제외하면 아직도 대다수 ASEAN 국가가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인프라 건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ASEAN 지역에서는 메콩강유역 개발사업(GMS: Great Mekong Subregion), IAI, ASEAN 교통실행계획(ASEAN Transport Action Plan 2005~2010), ADB 프로젝트, 교통장관회의 등을 통한 다양한 인프라 확충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향후 FTA와 FDI 확대로 ASEAN 국가들의 분업구도가 확대되면서 국별 인프라 건설과 주변국 간 인프라 네트워크 형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각국의 지하자원 확보 경쟁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 말레이시아와 같이 전통적으로 저비용 저임금을 이용한 제조업 성장기반이 갖추어진 국가들은 고유가로 인한 수출제품의 원가상승 압력이 국제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하락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농업에서 제조업 중심의 구조로 전환 중인 CLMV 국가들의 제조업 성장에도 고유가가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석유자원에 대한 높은 의존성을 낮추기 위해 바이오연료(Bio-Fuel)와 같은 대체연료 개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제조업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가진 ASEAN 국가들의 높은 석유에너지 의존도에 비해 바이오연료의 석유자원 대체효과는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바이오연료 개발 후에도 경제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효력을 나타내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석유자원 확보경쟁이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 제3장

# 한국과의 경제협력 현황 및 전망



## 한국과의 경제협력 현황 및 전망

### 1. 교역

ASEAN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한국의 대ASEAN 교역은 동아시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전세계 IT 제품의 수요 감소기인 2001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ASEAN은 중국, 미국, 일본, EU에 이은 5대 교역 대상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규모는 2006년 현재 618억 달러로 한국 총 교역의 10%대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수지 역시 1990년대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한국이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동남아국가들이 외환위기 이후 수출증대 및 수입억제 정책과 우리의 투자가 감소로 중간재 및 자본재의 수출유발효과가 크게 저하된 것이 무역수지 흑자 감소 원인으로 보인다.

표 3-1. 한국의 대ASEAN 교역 추이(1995~2006년) |

(단위: 백만 달러, %)

연 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출(a)	17,979	20,311	20,365	15,328	17,708	20,134	16,459	18,400	20,253	24,024	27,432	32,066
증가율	44	13	0.3	-24.7	15.5	13.7	-18.2	11.8	10.1	18.6	14.2	16.9
수입(b)	10,137	12,074	12,549	9,135	12,249	18,173	15,916	16,757	18,458	22,383	26,064	29,743
증가율	29.2	19.1	3.9	-27.2	34.1	48.4	-12.4	5.3	10.2	21.3	16.4	14.1
수 지	7,842	8,237	7,816	6,193	5,459	1,961	543	1,643	1,795	1,641	1,368	2,323
총교역(a+b)	28,116	32,385	32,914	24,463	29,957	38,307	32,375	35,157	38,711	46,407	53,496	61,809
증가율	38.7	15.2	1.6	-25.7	22.5	27.9	-15.5	8.6	10.1	19.9	15.3	15.5
대세계 비중	10.81	11.56	11.72	10.84	11.37	11.51	11.10	11.18	10.39	9.70	9.80	9.74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동남아 주요국과 한국의 교역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현재 싱가포르와의 교역이 154억 달러를 기록하여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의 순으로 교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제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은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자원을 한국이 많이 수입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은 우리 기업들의 투자 진출로 인한 중간재 및 자본재의 수출이 많은 점도 특징이다. 그리고 우리가 자원을 수입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 인텔을 중심으로 반도체 수입이 많은 말레이시아로부터는 무역수지 적자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중계무역항 기능의 싱가포르 및 최근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베트남과는 많은 규모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 표 3-2. 한국의 대ASEAN 각국별 교역 추이(1995~2006년) ▮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라 오 스	0	10	9	5	12	5	6	4	8	10	16	41
			-10.0	-44.4	140.0	-58.3	20.0	-33.3	100.0	25.0	60.0	156.3
말레이시아	5,466	7,340	7,639	5,813	6,802	8,393	6,754	7,259	8,101	10,159	10,620	12,469
	54.9	34.3	4.1	-23.9	17.0	23.4	-19.5	7.5	11.6	25.4	4.5	17.4
미얀마	100	148	154	161	203	312	283	199	213	192	176	217
		48.0	4.1	4.5	26.1	53.7	-9.3	-29.7	7.0	-9.9	-8.3	23.3
베트남	1,545	1,831	1,842	1,545	1,709	2,008	2,118	2,710	3,072	3,929	4,126	4,852
	35.3	18.5	0.6	-16.1	10.6	17.5	5.5	28.0	13.4	27.9	5.0	17.6
브루나이	399	508	516	358	297	508	468	489	531	725	848	1,228
	23.0	27.3	1.6	-30.6	-17.0	71.0	-7.9	4.5	8.6	36.5	17.0	44.8
싱가포르	8,857	8,966	8,214	5,778	7,234	9,371	7,091	7,652	8,726	10,115	12,725	15,376
	52.4	1.2	-8.4	-29.7	25.2	29.5	-24.3	7.9	14.0	15.9	25.8	20.8
인도네시아	6,283	7,211	7,648	4,842	6,526	8,791	7,754	7,868	8,590	10,046	13,230	13,723
	16.7	14.8	6.1	-36.7	34.8	34.7	-11.8	1.5	9.2	16.9	31.7	3.7
캄보디아	0	0	54	63	85	98	109	118	110	133	150	210
		25.6	46.7	16.7	34.9	15.3	11.2	8.3	-6.8	20.9	12.8	40.0
태국	3,364	3,883	3,527	2,259	2,803	3,646	3,437	4,038	4,422	5,600	6,070	7,574
	37.0	15.4	-9.2	-36.0	24.1	30.1	-5.7	17.5	9.5	26.6	8.4	24.8
필리핀	2,104	2,487	3,313	3,639	4,288	5,175	4,354	4,817	4,939	5,499	5,536	6,118
	29.5	18.2	33.2	9.8	17.8	20.7	-15.9	10.6	2.5	11.3	0.7	10.5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품목별(MTI 1단위)로는 동아시아 외환위기 직후 50%에 육박했던 전자·전기제품에 대한 수출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전체 수출의 40% 이하를 차지하고 있고 광산물과 철강금속제품의 수출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기계류도 여전히 많이 수출되고 있다. 반면 동남아의 풍부한 자원을 중심으로 한 광산물이 전체 수입의 39%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으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의 급속한 수출산업 고도화로 2000년 이후 전자·전기제품의 수입비중도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3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농림수산물의 수입비중은 낮아지고 있고 화학공업제품의 수입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 표 3-3. 한국의 대ASEAN 품목별 교역구조 추이(금액 및 MTI 1단위 기준) ■

(단위: 백만 달러)

코드	품목	1996년	1998년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총수출	20,311	15,328	20,134	18,400	24,024	32,066
0	농림수산물	177	143	162	170	180	266
1	광산물	3,252	1,188	1,374	1,118	1,513	4,196
2	화학공업제품	1,912	1,425	2,196	1,937	2,867	3,402
3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675	478	592	540	633	639
4	섬유류	1,865	1,408	1,990	1,892	2,028	2,305
5	생활용품	294	230	288	258	277	294
6	철강금속제품	1,784	1,241	1,492	1,683	2,463	3,837
7	기계류	3,115	1,844	2,427	2,643	3,486	4,431
8	전자·전기제품	7,199	7,348	9,564	8,122	10,519	12,626
	총수입	12,074	9,135	18,173	16,757	22,383	29,743
0	농림수산물	2,452	1,137	1,549	1,700	2,133	2,733
1	광산물	4,555	3,685	6,268	5,075	7,689	11,647
2	화학공업제품	648	600	1,117	1,262	1,789	2,324
3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74	66	127	127	195	219
4	섬유류	321	258	463	513	550	674
5	생활용품	194	94	164	203	239	354
6	철강금속제품	443	319	421	378	820	1,033
7	기계류	297	198	421	425	480	590
8	전자·전기제품	3,049	2,757	7,613	7,035	8,449	10,117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 표 3-4. 한국의 대ASEAN 품목별 교역구조 추이(비중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코드	품목	1996년	1998년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총수출	20,311	15,328	20,134	18,400	24,024	32,066
0	농림수산물	0.9	0.9	0.8	0.9	0.7	0.8
1	광산물	16.0	7.8	6.8	6.1	6.3	13.1
2	화학공업제품	9.4	9.3	10.9	10.5	11.9	10.6
3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3.3	3.1	2.9	2.9	2.6	2.0
4	섬유류	9.2	9.2	9.9	10.3	8.4	7.2
5	생활용품	1.4	1.5	1.4	1.4	1.2	0.9
6	철강금속제품	8.8	8.1	7.4	9.1	10.3	12.0
7	기계류	15.3	12.0	12.1	14.4	14.5	13.8
8	전자·전기제품	35.4	47.9	47.5	44.1	43.8	39.4
	총수입	12,074	9,135	18,173	16,757	22,383	29,743
0	농림수산물	20.3	12.4	8.5	10.1	9.5	9.2
1	광산물	37.7	40.3	34.5	30.3	34.4	39.2
2	화학공업제품	5.4	6.6	6.1	7.5	8.0	7.8
3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0.6	0.7	0.7	0.8	0.9	0.7
4	섬유류	2.7	2.8	2.5	3.1	2.5	2.3
5	생활용품	1.6	1.0	0.9	1.2	1.1	1.2
6	철강금속제품	3.7	3.5	2.3	2.3	3.7	3.5
7	기계류	2.5	2.2	2.3	2.5	2.1	2.0
8	전자·전기제품	25.3	30.2	41.9	42.0	37.7	34.0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품목을 MTI 3단위로 세분화해 10대 수출입품목을 살펴보면, 동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 수출입 모두에서 반도체(MTI 831)가 가장 많이 교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출은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철강관,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합성수지, 자동차, 컴퓨터, 편직물 등이, 수입은 천연가스, 원유, 컴퓨터, 석탄, 석유제품, 동광, 임산부산물, 목재류, 동제품 등이 10대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수입의 경우 자원과 관련된 품목이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3-5. 한국의 대ASEAN 10대 수출품목 추이(MTI 3단위 기준)

순 위	1996년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코드	품목명	코드	품목명	코드	품목명	코드	품목명	코드	품목명
1	831	반도체	831	반도체	831	반도체	831	반도체	831	반도체
2	111	금, 은 및 백금	133	석유제품	813	컴퓨터	812	무선통신기기	133	석유제품
3	613	철강관	832	전자관	812	무선통신기기	813	컴퓨터	812	무선통신기기
4	832	전자관	812	무선통신기기	133	석유제품	133	석유제품	613	철강관
5	741	자동차	214	합성수지	613	철강관	613	철강관	746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6	133	석유제품	813	컴퓨터	832	전자관	741	자동차	214	합성수지
7	746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613	철강관	741	자동차	214	합성수지	741	자동차
8	821	영상기기	741	자동차	746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832	전자관	813	컴퓨터
9	214	합성수지	439	기타직물	214	합성수지	439	기타직물	436	편직물
10	434	인조장 섬유직물	434	인조장 섬유직물	439	기타직물	436	편직물	622	동제품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표 3-6. 한국의 대ASEAN 10대 수입품목 추이(MTI 3단위 기준)

순 위	1996년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코드	품목명	코드	품목명	코드	품목명	코드	품목명	코드	품목명
1	134	천연가스	831	반도체	831	반도체	831	반도체	831	반도체
2	831	반도체	813	컴퓨터	134	천연가스	134	천연가스	134	천연가스
3	131	원유	134	천연가스	131	원유	131	원유	131	원유
4	31	목재류	131	원유	813	컴퓨터	813	컴퓨터	813	컴퓨터
5	133	석유제품	133	석유제품	133	석유제품	133	석유제품	132	석탄
6	813	컴퓨터	31	목재류	31	목재류	132	석탄	133	석유제품
7	33	임산부산물	113	동광	33	임산부산물	31	목재류	113	동광
8	15	기호식품	33	임산부산물	251	제지원료	33	임산부산물	33	임산부산물
9	13	식물성물질	832	전자관	113	동광	814	전자응용기기	31	목재류
10	11	곡실류	251	제지원료	832	전자관	13	식물성물질	622	동제품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 2. 투자

한국의 동남아에 대한 투자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이른 1968년에 시작되었는데, 한국남방개발(주)이 인도네시아에 투자한 것이 한국의 최초 해외투자였다. 그러나 동남아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된 것은 1980년대 들어서고, 1990년대 들어서면서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였다. 동아시아 외환위기 직후 감소세를 보인 적이 있으나, 2003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06년까지의 누계치를 보면, 신고 기준으로는 4,603건, 161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투자기준으로는 3,965건, 85억 달러를 넘어섰다. 투자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총 해외투자의 12.3%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한·중 수교 이후 중국으로의 투자 집중과 동남아 경제침체 등으로 대동남아 투자는 상대

표 3-7. 한국의 대ASEAN 직접투자 추이

(단위: 천 달러, %)

연도	신고기준			투자기준		
	신고건수	신고금액	비중	투자건수	투자금액	비중
~1990년	451	2,427,898	22.58	298	601,046	17.9
1991년	143	401,860	22.4	135	328,406	29.6
1992년	120	271,709	13.4	106	270,848	22.3
1993년	162	250,683	12.6	106	167,671	13.3
1994년	405	559,191	15.4	275	257,501	11.2
1995년	214	781,207	15.0	185	610,795	19.7
1996년	256	805,098	11.5	217	458,353	10.3
1997년	216	1,084,161	17.8	174	622,734	16.8
1998년	74	736,393	12.6	62	512,390	10.6
1999년	126	467,037	9.2	114	461,387	13.9
2000년	198	693,383	11.4	185	471,050	9.3
2001년	221	498,444	7.8	192	386,653	7.5
2002년	289	643,152	10.3	268	350,398	9.5
2003년	250	1,245,468	22.3	234	544,633	13.4
2004년	307	707,399	9.0	282	513,291	8.6
2005년	450	928,207	10.3	424	649,624	9.9
2006년	721	3,687,059	20.0	708	1,349,083	12.6
누 계	4,603	16,188,349	15.3	3,965	8,555,863	12.3

자료: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적으로 비중이 낮아졌다. 2000년대 들어서는 활발한 베트남에 대한 투자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동남아 내 국가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많이 진출해온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베트남, 싱가포르 순으로 많이 투자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과 싱가포르에 대한 투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하고 노동력이 풍부하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차이나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지역으로 투자가 몰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 중 베트남에 대한 활발한 투자 진출은 베트남이 미국과의 항구적 무역관계정상화(PNTR) 지위 획득을 통한 우회수출기지로 부상함과 동시에 WTO에 가입(2007년 1월 11일)함에 따라 투자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등 유망 신흥시장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 표 3-8. 한국의 대ASEAN 국별 직접투자 추이(투자 기준) ▮

(단위: 천 달러,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총누계(~2006년)	
ASEAN전체	386,653	350,398	544,633	513,291	649,624	1,349,083	8,555,863	100.0 <sup>1)</sup>
라 오 스	35	50	746	2,090	0	2,815	42,626	0.5
말레이시아	20,394	8,119	13,070	38,366	21,097	61,033	578,564	6.8
미얀마	2,948	660	496	0	969	465	55,434	0.6
베트남	55,475	145,686	155,886	178,882	304,458	586,321	2,176,377	25.4
브루나이	0	0	0	0	0	91	2,014	0.0
싱가포르	40,918	58,486	234,564	164,185	122,058	303,852	1,467,553	17.2
인도네시아	173,227	72,238	81,808	56,361	78,313	138,051	2,392,445	28.0
캄보디아	5,540	4,107	9,670	13,653	30,859	122,125	209,263	2.4
태국	31,011	34,190	31,772	46,061	51,464	73,565	815,184	9.5
필리핀	57,105	26,862	16,621	13,693	40,406	60,765	816,403	9.5

주: 1) 한국의 대ASEAN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대동남아 투자(투자 기준)의 절반 이상이 진출해 있고,

그 다음으로 자원 분야인 광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대세계 투자에서 동남아 투자가 12.3% 차지하고 있음을 비교할 때 통신업, 운수창고업, 광업 등에 상대적으로 많이 진출해 있고, 최근에는 건설업과 부동산업 투자가 활발함을 알 수 있다.

표 3-9. 한국의 대ASEAN 업종별 직접투자 구조(~2006년) ▮

(단위: 백만 달러, %)

업종	신고 기준			투자 기준		
	신고건수	신고금액	비 중 <sup>1)</sup>	투자건수	투자금액	비 중 <sup>1)</sup>
총 계	4,603	16,188.3	15.3	3,965	8,555.9	12.3
농림어업	96	143.9	14.1	81	81.4	14.5
광업	65	2,354.9	19.0	57	1,054.1	20.7
제조업	3,072	8,643.4	15.9	2,608	4,762.8	13.0
건설업	275	847.5	27.6	236	338.2	19.9
도소매업	395	958.7	5.6	352	789.5	5.8
운수창고업	113	250.9	17.2	99	140.3	22.3
통신업	32	694.2	26.9	30	435.2	24.0
금융보험업	5	1.8	0.1	4	1.7	0.1
숙박음식점업	97	408.8	14.5	84	149.9	9.0
서비스업	368	804.4	12.3	335	458.5	10.2
부동산업	84	1,079.8	34.8	78	344.1	19.7
기타	1	0.05	0.8	1	0.05	1.8

주: 1) 한국의 대세계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http://www.koreaexim.go.kr)).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제조업 분야는 전자통신장비에 가장 많이 투자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섬유 의복, 석유화학 등에 많이 진출해 있다.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투자 중 동남아 비중은 12.3%이나, 부문별로 우리나라 전체 신발가죽 투자의 33.6%, 목재가구의 32.8%, 섬유 의복의 26%, 음식료품의 24.7%, 그리고 종이인쇄의 19.9%가 동남아에 집중 투자되고 있다. 전자통신장비나 석유화학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1980년대 말까지 노동집약적인 단순 제조업이나 자원가공을 위한 제조업 투자가 주종을 이루었던 것과는 비교가 되는 것으로, 한국의 대동남아 투자가 점차 높은 수준의 기술 및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표 3-10. 한국의 대ASEAN 제조업종별 직접투자 구조(~2006년) ■

(단위: 백만 달러, %)

업종 중분류	신고 기준			투자 기준		
	신고건수	신고금액	비 중 <sup>1)</sup>	투자건수	투자금액	비 중 <sup>1)</sup>
총 계	3,072	8643.4	15.9	2,608	4762.8	13.0
음식료품	130	510.3	24.1	109	365.1	24.7
섬유의복	771	1590.2	24.3	646	985.6	26.0
신발가죽	232	434.1	33.1	210	300.0	33.6
목재가구	114	1307.1	76.6	91	111.7	32.8
종이인쇄	95	222.7	25.1	75	92.8	19.9
석유화학	360	590.1	12.1	316	373.6	10.7
비금속광물	76	271.5	16.7	60	146.4	12.3
1차금속	96	516.8	18.3	78	265.8	11.1
조립금속	164	242.3	16.5	120	131.8	14.2
기계장비	249	530.4	11.9	224	214.1	7.5
전자통신장비	374	1791.0	11.1	345	1418.7	11.5
수송기계	126	326.6	3.9	113	154.3	3.0
기타	285	310.3	14.3	221	202.7	14.7

주: 1) 한국의 대세계 제조업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http://www.koreaexim.go.kr)).

반면 동남아의 한국에 대한 투자(허가 기준)도 동아시아 외환위기 직후부터 크게 증가하였다가 2003년 이후로는 연평균 6억 달러대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동남아의 대한국 투자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거의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싱가포르는 1998년 11억 8,382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말레이시아 역시 1999년 18억 달러, 2000년 14억 달러, 2001년 7억 8,477만 달러 등을 기록할 정도로 활발하였다. 2006년 말까지 동남아의 대한국 투자규모는

112억 4,691만 달러인데, 이 중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109억 7,888만 달러를 투자하여 전체의 97.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 각각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최대 투자국인 말레이시아의 경우 역외금융센터에는 라부안(Labuan)을 통한 투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남아의 대한국 투자를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64억 달러, 제조업이 41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1. ASEAN의 대한국 직접투자 추이(허가 기준)

(단위: 건, 백만 달러)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총누계 (~2006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ASEAN 전체	241	1,712.9	194	975.0	139	359.0	101	684.6	145	621.5	177	641.4	161	699.2	1,606	11,246.9
싱가포르	81	297.1	56	188.3	48	146.2	45	235.9	76	376.0	90	388.8	84	556.6	701	4,043.4
말레이시아	151	1,408.2	117	784.8	70	210.0	36	417.3	42	167.0	38	210.9	28	62.9	676	6,935.5

자료: 산업자원부(www.mocie.go.kr).

### 3. 정부간 협력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의 주요 무상원조 지원대상국으로, 한국은 1991~2006년간 총 2억 3,351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이는 한국의 전체 지원규모의 20%를 넘는 액수인데, 2006년에만 전체의 24%가 동남아에 집중되었다. 특히 동남아는 1990년대 들어 한국과 경제교류가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원조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최근 집중 지원대상국인 이라크를 제외하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은 한국의 최대 수원대상국에 속해 있을 정도이다. 2006년을 기준으로 하면, 이 국가들은 현재 전체 지원대상국 가운데 금액 기준으로 각각 2위, 3위, 5위, 6위, 9위, 16위를 점하고 있다. 무상자금 지원은 주로 프로젝트, 봉사단 파견, 연수생 초청, 개발 조사 등에 집중되고 있다.

표 3-12. 한국의 대ASEAN 국별 무상원조 지원실적(1996~2006년) ▮

(단위: 신고 기준, 천 달러, %)

국 가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브루나이	-	38	13	16	49	10	18.0	26	21	19	-
인도네시아	1,690	2,162	1,526	1,903	1,984	1,939	2,544	2,613	6,545	9,305	17,650
말레이시아	130	144	74	103	259	128	83	139	120	122	40
필리핀	850	655	509	539	2,224	3,038	1,729	5,964	6,366	5,059	6,644
싱가포르	5	-	3	4	-	-	-	-	-	0.2	-
태 국	1,148	730	827	379	651	599	869	904	1,990	3,150	1,349
캄보디아	241	1,803	301	297	637	1,057	1,467	2,341	3,341	5,813	6,328
라오스	437	825	216	297	629	681	1,262	2,048	3,379	2,119	4,243
미얀마	890	379	551	466	730	651	1,406	1,460	2,045	3,407	2,794
베트남	3,472	2,662	3,127	6,193	4,880	4,814	4,700	3,515	9,789	9,290	7,873
ASEAN 전체	8,863	9,398	7,147	10,197	12,043	12,917	14,078	19,010	33,596	38,284	46,921
비중	21.5	21	23.2	33.1	31.4	27.5	23	15.3	18.9	18.2	24.2

자료: KOICA.

1987년 우리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이 시작된 이후 2006년까지 동남아시아에 대한 지원은 총 44건 8억 9,713만 달러로, 총 EDCF의 32.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체의 1/3이 동남아에 집중되고 있음을 뜻하는데, 그 중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원은 총 13건 2억 7,170만 달러로, 전체 EDCF의 9.8%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1위인 인도네시아에 이어 베트남이 전체 금액 기준으로 3위, 캄보디아가 6위, 필리핀이 7위, 미얀마가 12위, 라오스가 28위를 기록하고 있다.

표 3-13. 한국의 ASEAN 국가에 대한 EDCF 지원 현황(누계, 2006년) ▮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sup>1)</sup>	국 가	개도국 차관			해외투융자	
		건수	금액	비중 <sup>1)</sup>	건수	금액
1	인도네시아	13	271.70	9.8	1	1.28
3	베 트 남	10	227.96	8.1		
6	캄보디아	6	159.29	6.4		
7	필 리 핀	8	130.78	4.6	1	0.86
12	미 얀 마	6	84.70	2.9		
28	라 오 스	1	22.70	0.9		
	ASEAN 전체	44	897.13	32.7	2	2.14

주: 1) 한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순위와 비중을 의미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 4. 한 · ASEAN FTA 추진 현황과 성과

### 가. 추진 경과

ASEAN+3 혹은 ASEAN+6 등 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체 구성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동아시아 국가들과 ASEAN의 경제통합 및 경제협력 시도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움직임으로 2005년 중 · ASEAN FTA 발효로 시작된 동아시아 주요국들의 ASEAN과의 FTA를 들 수 있으며, 한국도 ASEAN과의 FTA를 통해 양자간 교역 및 경제협력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 ■ 글상자 3-1. 한 · ASEAN FTA 추진 주요 일정 ■

##### □ 한 · ASEAN 공동연구 및 협상 개시

- 2004년 3월: 제1차 공동연구 개최(인도네시아)
- 2004년 8월: 한 · ASEAN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민간 자문회의 개최
- 2004년 8월: 제5차 공동연구 개최(인도네시아)
- 2004년 11월: 한 · ASEAN 정상회의, FTA 개시 선언

##### □ 한 · ASEAN FTA 협상 추진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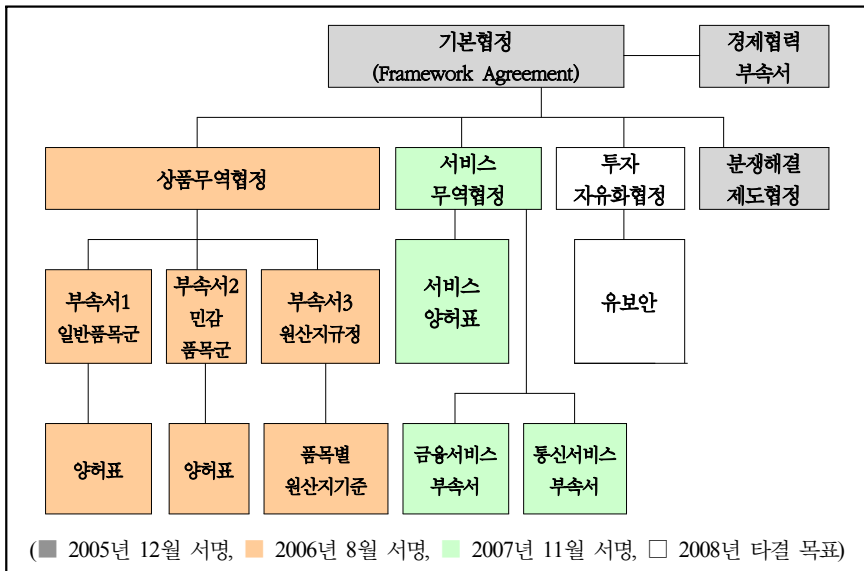
- 2005년 2월: 제1차 협상개최(인도네시아)
- 2005년 12월: 한 · ASEAN 정상회의, 기본협정 및 분쟁해결제도협정 서명
- 2006년 8월: 한 · ASEAN 경제장관회의, 상품무역협정 서명
- 2007년 4월: 한 · ASEAN FTA 기본협정, 분쟁해결제도협정, 상품무역협정 국회 비준
- 2007년 6월: 한-ASEAN 상품무역협정 발효
- 2007년 10월: 제 20차 협상 개최 (라오스), 투자협정 타결 2008년으로 연장
- 2007년 11월: 한 · ASEAN 정상회의, 서비스무역협정 서명

한 · ASEAN FTA는 2003년 10월 한 · ASEAN 정상회의를 통해 한 · ASEAN FTA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다섯 차례에 걸친 공동연구 결과, 한 · ASEAN 간 경제자유화가 양측 모두

의 경제적 이익을 증가시킬 것이며 민간품목을 제외한 상품교역에 대한 관세 철폐 및 서비스·투자의 자유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에 2004년 11월 한·ASEAN 정상회의에서 2년 내 타결을 목표로 한·ASEAN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양자간 협상이 시작되었다.

한·ASEAN FTA는 경제발전 격차가 큰 ASEAN 각국과의 협상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단일협상방식이 아닌 기본협정문을 토대로 상품무역협정 및 서비스·투자협정을 순차 추진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2005년 인도네시아에서의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회에 걸친 협상을 통해 2005년 12월 기본협정 및 분쟁해결제도협정 서명, 2006년 8월 상품무역협정 서명, 2007년 상품무역협정 발효 등을 거쳐 2007년 11월 서비스무역협정 서명까지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투자협정 체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림 3-1. 한·ASEAN FTA 협정 구성



자료: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 나. FTA 주요 내용

한·ASEAN FTA의 상품무역협정은 2005년 12월 체결된 기본협정을 근거로 2006년 8월 최종서명을 완료하였으며 본문 이외에 3개의 부속서가 포함되어 있다. 관세인하 및 철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상품무역협정 전문 제3조에 기술되어 있으며, 세부사항은 부속서 1~2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품목은 일반품목군(Normal Track)과 민감품목군(Sensitive Track)으로 분류되며, 일반품목군은 전체 관세품목의 90% 이상이자 상대국(ASEAN의 경우 한국, 한국의 경우 ASEAN 전체)으로부터의 2004년 총수입액의 90% 이상이 되어야 한다.<sup>4)</sup>

일반품목군의 관세인하 및 철폐 일정을 살펴보면, 먼저 한국과 ASEAN 6(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부르나이)는 2010년까지, CLMV국가 중 상대적으로 경제발전 정도가 높은 베트남은 2016년, 그 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그리고 민감품목군 중 일반민감품목의 경우 최종 합의된 기한 내에 관세를 0~5%로 인하해야 하며, 초민감품목은 A) 50% 관세율 상한, B)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의 최저 20% 삭감, C)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의 최저 50% 삭감, D) 환세할당 부과, E) 관세인하 및 철폐에서 제외 등 5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관세율 조정이 실시되며 그 시기도 국가별로 달리 적용된다.<sup>5)</sup>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총 4,742개 품목을 일반품목군으로 개방하고 482개를 민감품목으로 분류하였으며, 민감품목 중 200개(수입액 기준 2.81%) 품목의 농수산물을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해 시장개방으로부터 보호하였다. 그리고

4) 민감품목군의 분류기준은 3가지 형태를 띠는데, A) 한국과 ASEAN 6는 관세품목 및 수입액 10% 미만, B) 베트남은 관세품목 10% 및 총수입액 25% 미만, C) 나머지 3개국(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은 관세품목 10% 미만 기준만을 적용함.

5) 초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일정은 국가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는데, A, B, C 그룹에 대해서 한국 및 ASEAN 6 국가들은 2016년 1월 1일, 베트남은 2021년 1월 1일, 나머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2024년 1월 1일까지 각 그룹별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일정으로 진행 중임.

ASEAN 회원국들로 하여금 초민감품목 수입액 3% 상한선으로 인해 수입비중이 큰 자동차(4.5%)와 철강(5.1%) 분야를 일반품목 혹은 일반민감품목으로 분류하도록 유도해 이들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및 철폐를 이끌었다.

2007년 11월 체결된 서비스무역협정은 협정문 본문, 서비스 양허안, 통신 및 금융분야에 대한 2개 부속서로 구성된다. 협정문의 경우 대체로 GATS 수준에서 안보상의 예외 조항을 구체화한 반면,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각국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문제발생시 추후 협의키로 하였다. 이 외에도 방송 공동제작 허용을 통해 각국의 방송 쿼터를 우회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으며, 금융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 및 기한(1년)을 명시하여 무분별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제한하였다. 양허 관련해서는 컴퓨터, 통신, 해운, 건설, 금융 등 우리 기업의 주요 진출 대상 분야에 대해 GATS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확보했다. 반면 한국측의 개방수준은 DDA 양허수준에 ASEAN측의 개방 요청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한·미 FTA의 개방수준보다 낮으며, 특히 인력분야에 대해서는 DDA 양허수준을 유지해 낮은 임금을 경쟁력으로 삼는 비전문인력 진출 확대를 막아 국내 노동시장을 보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다. 의미 및 평가

한·ASEAN FTA는 한국이 거대경제권과 맺은 최초의 FTA이자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ASEAN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회복으로 주요 수출시장으로 부상한 ASEAN 시장 선점을 위한 발판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특히 2005년 7월 발효된 중·ASEAN FTA 상품협정에 비해 한·ASEAN FTA 상품협정은 발효가 2년이나 늦게 이루어졌지만, 중·ASEAN FTA에서 2010년까지 일반품목군의 관세철폐를 합의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초민감품목에 대한 품목 및 수입액 기준 3%를 부여해 수입은 적으나 민감한 품목인 농수산물을 보호하고, 대ASEAN 수출량이 많은 공산품에 대해 ASEAN 측의 수입제한폭을 제한하는 성과를 이끌어내면서 중·ASEAN FTA에 비해 내용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를 인정받은 점도 의미가 크다. 기존 한·싱가포르 및 한·EFTA FTA에서도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 한국산 원산지 인정에 합의한 바 있으나, 상호간 주력품목이 경합하는 ASEAN으로부터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은 향후 개성공단에 대한 원산지 인정을 정형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ASEAN과의 서비스 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ASEAN 시장진출 경험을 축적하여 한국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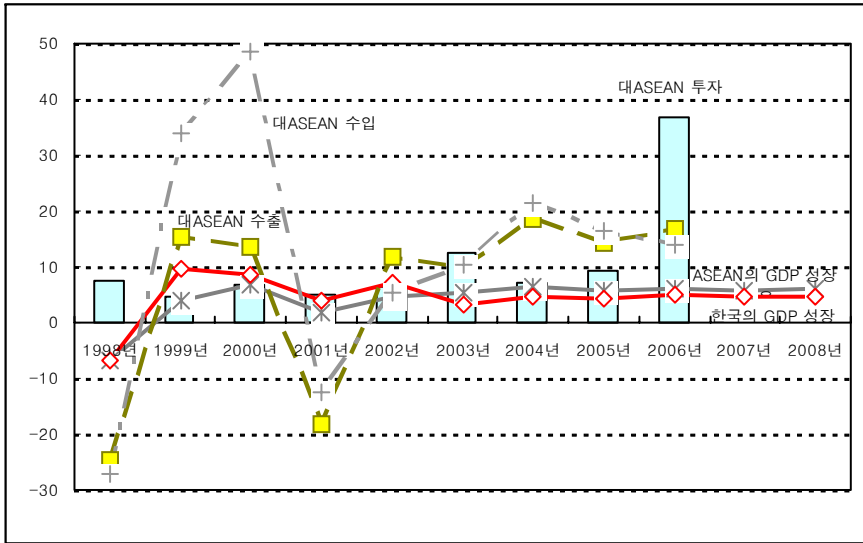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상품무역협정에서 이끌어낸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등 주요 교역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효과와 서비스무역협정에서 확보한 높은 수준의 ASEAN 서비스 시장개방이 서로 상보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ASEAN 시장에서 한국기업들의 기업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 5. 한·ASEAN 경제협력 전망

한국과 ASEAN의 경제교류는 갑작스러운 경기침체나 1997년과 같은 위기가 오지 않는 한 향후에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대외무역뿐만 아니라 투자, 정부간 협력 등 양 지역간 경제협력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양 지역간 수출입 증가율은 큰 변동을 겪었는데, 이는 양 지역의 GDP 성장률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한국의 대ASEAN 투자도 2004년 이후 증가하고 있고 2006년에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양 지역은 당분간 현재보다 조금 높은 GDP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그림 3-2]과 같은 수출입 및 투자의 지속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2. 한국과 ASEAN의 GDP 성장률과 대ASEAN 수출입·투자 추이

(단위: %, 억 달러)



주: 대ASEAN 투자는 한국수출입은행 통계로 허가기준임.

자료: ADB, 한국은행, KOTIS, 한국수출입은행.

무엇보다 다음 여러 가지 요인들은 한국과 ASEAN 간의 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양 지역의 고도성장이 지속되고 ASEAN 지역은 신흥시장으로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양 지역의 수입시장 역시 더욱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경제통합의 가속화로 양 지역간 경제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ASEAN FTA 중 상품 분야는 2007년 6월부터 발효되었고 서비스 분야 역시 2007년 내 타결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장기적이지만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경제교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로는 차이나 리스크와 관련된 것으로, 향후 위안화 환율의 급변, 중국 내 反외자 정서의 확대, 임금 상승 속도 증가, 중국 정부의 기술이전 요구 확대 등 차이나 리스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중국에 대한 보완투자지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ASEAN이 더욱 부상하여 우리의 투자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러한 움직임은 이미 베트남을 중심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넷째로는 세계에서 한국의 경제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뿐 아니라 정부간 협력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공적개발원조(ODA)의 수원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성공적인 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향후 ODA 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어 동남아와의 정부간 협력은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우리의 중점 지원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원유와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과 철강 등의 광물자원 확보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 이를 둘러싼 동남아와 우리나라의 교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남아는 원유와 가스, 철강 등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우리의 중요한 자원공급기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제4장

# ASEAN에 대한 주요국의 전략



## ASEAN에 대한 주요국의 전략

### 1. 중국

1967년 ASEAN 성립 이후 중국과 ASEAN 간의 관계는 국경 및 이념문제로 인해 1980년대까지 장기간의 소원기와 정체기를 겪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 중·미 관계가 개선되고 중·소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ASEAN의 태도가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 들어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에 따라 대외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과 ASEAN의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은 외교적 고립을 타개하기 위해 동남아 지역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고, ASEAN 회원국과의 정식 외교관계 수립 및 회복에 주력하였다.<sup>6)</sup> 1990년대 들어 중국과 ASEAN의 관계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미국, 일본, 인도,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과 전략적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으로서는 ASEAN 국가들과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중국의 대외개방이 가속화되고 쌍방 모두 공업화와 현대화 추진의 필요성에 따라 경제협력 강화에 매진하면서 경제관계를 기반으로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기 시작하

---

6) 중국은 1974년과 1975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1990년에는 인도네시아와 외교관계를 회복하였고 싱가포르와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이어 1991년 브루나이와 국교를 수립하고 베트남과도 관계를 정상화하였다.

였다.

중국과 ASEAN 간의 공식적인 대화는 1991년 중국 외교부장이 ASEAN 외무장관 회의에 초청 참석함으로써 시작되었고, 1994년 ASEAN지역안보포럼(ARF) 창설 당시 중국도 회원국에 포함되었다. 1996년 ASEAN은 중국을 ‘교섭 파트너’에서 ‘대화 파트너’로 승격하여 전면적인 대화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1997년 중국과 ASEAN 협력의 제도적 장치가 완비됨에 따라 경제·정치적 관계 개선의 발판이 마련되고, 중국과 ASEAN은 ASEAN+3 회담과 더불어 ASEAN+1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중·ASEAN 경제무역연합위원회, 중·ASEAN 과학기술연합위원회, 중·ASEAN 고위관료회의, 중·ASEAN 연합위원회, ASEAN 베이징위원회 등 5대 대화채널이 완성되었다.

2000년대 들어 중국과 ASEAN은 1990년대 중·후반에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2002년 중·ASEAN 자유무역지대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남중국해 행동지침 선언」<sup>7)</sup>에 서명하였으며, 2003년 「동아시아 우호협력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경제적 신뢰 구축에 이어 정치·안보적 신뢰를 구축하는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해왔다.

특히 「남중국해 행동지침 선언」은 양측간 쟁점이 되어온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 이 선언이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중국과 ASEAN이 남중국해 분쟁 해결과 관련해 최초로 서명한 공식 문건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중국은 「동남아우호협력조약」 가입을 통해 ASEAN과의 신뢰 구축에 중대한 진전을 이룩하였으며, ASEAN과의 정치적·전략적 기초 위에 경제적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고 있다.

1997년 이전까지 중국의 대ASEAN 접근은 주로 인도차이나 국가들에 집중되었으나,<sup>8)</sup>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중국의 대ASEAN 접근에 중요한 전

7) 南海各方行为宣言,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8) 중국은 ASEAN 국가들과의 공식수교 이전부터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차이나 국가들에 대한 정치·외교·이념·경제·군사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동남아 진출의 전초기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왔다.

기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중국은 199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다양한 역내 문제 해결에 한층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ASEAN 국가들에 대한 경제 및 정치·외교·군사·안보 측면의 접근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ASEAN과의 관계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WTO 가입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투자 및 무역 관계가 변화하고, 국제분업 형태도 변화함에 따라 쌍방간 경제협력이 강화되었고, 9·11 테러와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의 영향력이 동북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로 확대되면서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안보협력 강화의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이러한 각도에서 ASEAN과의 협력 강화는 경제적 의의뿐만 아니라 정치·안보적 이익의 수요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중국과 ASEAN의 관계 발전이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가능하였다는 점이다. 중국과 ASEAN 협력의 제도적 기반은 1990년대에 다져졌으며, 정상회담 → 관계장관회의 → 분야별 위원회로 구성된 계층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상호 신뢰 및 협력’을 강조하는 양·다자 협정, 협의, 조약, 연합성명 등을 통해 진일보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의 대ASEAN 외교정책의 핵심은 “이웃과 우호적으로 동반자 관계를 설정 한다”<sup>9)</sup>이며, 먼저 경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정치·안보적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개혁·개방 이후 자국 시장을 개방하고 세계경제와의 통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주변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000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에서 주룽지 총리가 ASEAN과의 FTA 추진을 전격적으로 제의하는 등 ASEAN+1 차원에서 실질적인 협력기반을 강화할 것임을 표명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중국이 WTO 가입을 전후하여 ASEAN과 긴밀한 정치·외교적 관계를 복원하고, FTA 추진에도

9) 중국의 주요 외교목표 가운데 하나는 선린(善隣)외교이다. 이는 많은 국가와 국경이 인접해 있는 중국 외교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로, ASEAN과의 관계 역시 선린외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중·ASEAN FTA 협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2003년 10월 발리에서 개최된 제7차 ASEAN+3 정상회의 기간 중에는 동남아우호조약(TAC)에 가입하는 한편 ASEAN과 포괄적 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중국은 2004년 9월 ASEAN·중국 경제통상장관회담에서 ASEAN으로부터 ‘시장경제국 지위’에 대한 인정을 받고, 대신 ASEAN 각국에는 예외품목을 대폭 인정해주는 양보를 통해 2004년 10월 FTA 추진을 위한 최종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2005년 7월 중·ASEAN FTA가 공식 발효되었다.

경제적으로 중국·ASEAN 자유무역지대 설립이 양 지역의 경제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과 함께 양 지역간 자원, 상품 및 경제구조상의 상호 보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과 ASEAN 간의 양자간 교역은 공산품이 전체 교역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교역 품목인 전자기기, 컴퓨터, 플라스틱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교역 상품 구조는 양자간 교역이 연료, 석유, 목재 등 1차산품에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조업의 경우 상호경쟁적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ASEAN의 주요 생산국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미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제3시장에서도 비슷한 실정이다.

따라서 AFTA 진전과 함께 중·ASEAN 자유무역지대에 의한 역내 분업체제 개편은 동남아 국가들의 산업구조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SEAN은 거대시장 중국에 대한 진출기회를 확대하고, 중국과의 수평적 분업관계를 구축하여 교역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중국은 FTA를 통해 ASEAN 지역에서 중국 위협론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경제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는 동남아와 인접한 중국 남서부지역의 경제성장 촉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석유 등 천연자원 확보가 있다. 특히 중·ASEAN FTA의 경우 인구 17억 명의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로, 이 지역의 경제력과 국제무대 발언권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중국은 「ASEAN 지역안보포럼」과 「동남아우호협력조약」에 가입, 안

보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치·안보적 관계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sup>10)</sup> 안보적 측면에서 중국의 대ASEAN 접근은 아태지역 국제질서의 다극화 모색,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대일 패권경쟁 우위 확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긍정적인 이미지 부각 등을 겨냥한 다목적의 전략적 고려에 의한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대중 봉쇄를 목표로 한 미국 주도의 집단안보체제에 ASEAN이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sup>11)</sup>

중국은 그동안 친ASEAN 정책을 통해 중·ASEAN FTA 추진과 함께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에 가입하는 등 ASEAN 국가들과 관계 강화에 역점을 두어 왔다. 이를 기반으로 역내 지역협력을 위한 주도권 경쟁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주도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말레이시아와 태국 등의 협조하여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조기 개최에 역내국가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온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ASEAN의 전략위상 저하를 우려하는 싱가포르 등 역내 국가들의 반대로 ASEAN의 영향력을 활용한 ASEAN+3 협력체제의 제도적 기반 강화라는 전략이 난관에 봉착한 바 있다. 이같이 EAS 조기개최를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역내 외 국가들의 불필요한 견제를 유발하게 된 중국으로서는 참여국 확대에 의해 EAS의 당초 성격이 변하였다는 판단하에 역내에서 ASEAN의 주도적 역할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동남아 국가들과의 대립과 갈등을 피해나가는 등 외교적으로 발빠르게 대처하며 ASEAN의 후원세력임을 자처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ASEAN의 관계는 경제적 고려뿐만 아니라 정치·안보적 입지 강화와 대만문제, 중국 서남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전략적 고려가 내포된 것이고, 향후에도 경제·정치·안보상 상호간의 필요성 증대로 중국과 ASEAN의 관계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주목할 점은 중국이 동남아 국가들에 내재해 있는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면서 군사안보적 차원이 아닌 자국

10) 2003년 11월 아시아 보아오포럼에서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ASEAN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선언하였다. 동반자관계는 미래지향적이며,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안보, 국제, 지역문제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1) 중국과 ASEAN의 정치, 안보현안과 관련해서는 배공찬(2003) 참고.

의 경제력과 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에서 주도권을 통해 ASEAN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ASEAN과의 관계 강화에 적극적인 중국의 자세에 대해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이 전략적인 경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ASEAN과의 실질적인 협력기반을 토대로 한 중국의 영향력 강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2. 일본

일본은 전후 배상을 통해 경제외교의 기점을 마련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정치·경제관계 개선을 도모해왔다. 동남아시아진출의 기점은 1953년 12월 요시다(吉田) 내각이 「아시아제국에 대한 경제협력방침」을 발표한 이후라고 할 수 있다.<sup>12)</sup>

그러나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주목하게 된 것은 1970년대 초반 이후이다. 1970년대 초반 브래튼우즈 체제 붕괴와 석유위기, 선진국의 경기침체에 의한 국제경제체제의 동요는 일본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일본이 동남아시아와의 관계발전을 모색하게 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특히 브래튼우즈 체제의 붕괴는 변동환율제로의 전환과 국제통화체제의 지역화 경향을 촉진시켜 장기적으로 엔블록화 형성을 내포하는 것이었고,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국제무역체제의 지역주의화에 대한 대응과 오일쇼크 이후 자원 확보를 위한 ASEAN과의 관계 진전을 적극 모색하게 되었다.<sup>13)</sup>

12) 일본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국교 회복을 목적으로 개별적인 배상교섭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803억 엔, 필리핀 1,902억 엔, 남베트남 140억 엔, 미얀마 720억 엔, 태국 52억 엔, 말레이시아 29억 엔, 싱가포르 29억 엔 라오스 10억 엔, 캄보디아 15억 엔을 지급한 바 있다(吉川利治編(1992, pp. 28~29) 참고.

13) 1973년 4월 개최된 ASEAN 6차 각료회담에서 일본의 합성고무 생산에 공식적인 반발이 일어나고, 1974년 다나카(田中) 총리의 동남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의 경제적 진출에 대한 반일감정이 고조되면서, 전후 일본이 소극적으로 유지해오던 이국간 관계를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동남아시아 관계 개선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6년 2월 개최된 ASEAN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역협

특히 1977년 8월에는 ASEAN 결성 1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2차 ASEAN 정상회담에 후쿠다(福田) 총리가 참석하고, 동남아시아를 순방하면서 ‘일본의 동남아시아정책’이라는 소위 「후쿠다(福田) 독트린」을 발표함으로써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그동안 일본의 대외정책에서 동아시아 역내의 국제분업이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동남아시아의 위상은 한층 강화되어 왔다. 그동안 일본은 동아시아 분업 구조를 일본을 선두로 한 ANIEs, ASEAN, 중국, 베트남 등의 순차적 발전구조로 규정하고, 아시아 역내경제를 안행형태의 산업발전 양상(wild geese flying pattern)에 따라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동아시아 경제의 중층적인 분업관계의 핵심고리인 동남아시아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교역 및 투자 확대를 통한 산업간 분업은 물론 대규모 원조를 바탕으로 일본제조업의 동남아시아 진출을 크게 확대시켜 왔다.<sup>14)</sup>

특히 일본의 동남아 진출이 질적인 전환을 맞이하게 된 계기는 1985년 플라자합의라고 할 수 있다. 엔고 국면에 진입하면서 그동안 국내에 집중시켰던 생산거점을 동남아시아에 본격적으로 이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은 비핵심 부문의 해외이전을 통해 기업 내 무역을 증대시켰던 기존의 진출방식에서 전환하여 주요 부품을 현지생산·조달함으로써 분업관계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본기업의 대동남아 진출전략은 엔고에 의한 생산비용 절감이라는 공급측 요인과 시장확보라는 수요측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여 ‘일본형 생산시스템’ 이전과 함께 현지화 및 네트워크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ANIEs에 이어 국민경제의 성장을 달성한 동남아시아의 소득증대 및 투자 확대를 기반으로 중층적인 분업구조가 심화·발전되고, AFTA를 중심으로 역내 시장 통합 움직임에 대응하여 설비·부품 등 원부자재의 물류통합화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 등 기술협력을 통한 분업관계를 심화시켜 나가

의체로서 ASEAN에 대한 체계적인 구상을 시작하게 되고, 1997년에는 ‘ASEAN·일본 포럼’이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14) 일본의 동남아 진출패턴과 특징에 대해서는 권 율(1999, p. 167~174) 참고.

고 있다. 이 같은 동남아시아 진출기반 확대는 일본의 철저한 현지화 전략과 함께 자동차, 전자 등 제조 부문의 부품산업 표준화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한편 1990년대 이후 일본경제의 버블붕괴와 함께 엔고에서 엔저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아시아 내 선·후진국 간 순차적인 산업발전 양상과 상호보완적인 경제관계가 취약해지고, 수출 및 성장 기조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중국경제의 대두, 동남아시아 역내 경제통합의 가속화, 199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라는 변화에 따라 동남아 경제권과의 협력관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동남아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일본기업들은 외환위기 이후 현지 시장축소, 환리스크 증대, 자금조달 곤란이라는 다양한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남아를 최적 생산 거점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2000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 회의에서 ASEAN과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전격 제의하면서 ASEAN을 매개로 한 지역통합 논의에서 중·일 간 경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이 ASEAN과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합의하자 일본은 향후 본격화될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동남아와의 경제통합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싱가포르와의 FTA 협상 체결로서 1999년 12월 일본의 오부치 전 총리와 고척동 총리의 합의로 양국 FTA 공동연구가 추진되고, 중·ASEAN FTA 추진에 대응코자 신속히 협상을 마무리한 바 있다.<sup>15)</sup>

또한 2002년 초 고이즈미 총리는 동남아국가들을 차례로 순방하여 일본의 ASEAN 중시정책을 표명하였다. 특히 일본은 2003년 10월 8일 발리에서 개최된 일·ASEAN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연대협정(Framework for Comprehensive Partnership)에 서명하고 앞으로 10년내 FTA를 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15) 2000년 9월 FTA 협정 추진에 대한 1차적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고, 이를 토대로 2000년 10월 고척동 총리와 모리 총리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키로 공식 합의하여 네 차례에 걸쳐 협상을 추진한 바 있으나, 당초 협정 체결은 2003년으로 예상되었다.

한 일본은 ASEAN 10개국 정상을 도쿄로 초청하여 2003년 12월 11~12일 양일간 특별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일본의 ASEAN 중시정책을 골자로 한 도쿄선언을 채택하였다. 도쿄선언에는 동아시아 공동체로 향한 협력을 명시하고, 정치·안보, 경제, 개발, 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광범위한 연대 강화를 표명함으로써 일·ASEAN 관계의 기본적인 협력지침을 마련하였다.

현재 일본은 특별 정상회담을 통해 ASEAN에 대한 중시정책을 강화하면서 그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던 동남아국가들과의 FTA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농업을 포함한 일부 광공업 제품의 관세철폐에 부담을 느끼고,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경제연대협정(EPA)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WTO 협상이 지연되고, 동아시아 역내에서 중국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면서 일본의 FTA 추진 노력이 보다 적극화되고 있다.

중국과 달리 일본은 개별 국가와의 FTA 추진에 중점을 두었는데, 싱가포르와의 EPA는 일본의 첫 EPA 협정이며, 이후 다른 ASEAN 국가와의 EPA 협상에 기초가 되었다. 싱가포르와의 FTA는 「일·싱가포르 신시대 EPA」와 「21세기를 위한 일·싱가포르 파트너십 프로그램(Japan-Singapore Partnership Programme for 21st Century, 이하 JSPP21)」을 기반으로 2002년 1월 고이즈미 총리의 싱가포르 방한 시 고축동 총리와 EPA 협정에 서명, 2002년 11월 30일 발효되었다. 그 이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브루나이, 인도네시아와 차례로 FTA를 체결하고 현재 베트남과는 교섭 중이며 ASEAN 전체와의 FTA 협상도 2007년 11월 싱가포르에서 제11차 교섭을 추진한 바 있다.

그동안 일본은 ASEAN 국가와의 EPA 협정을 통해 농수산물, 인적이동 개방수준을 투자유치와 기술이전 등을 통해 양보를 받았으나 경제관계가 심화될수록 개방압력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일본은 내부적으로 농수산물과 같은 1차산업의 개방문제나 인적이동에 대한 정부부처 간 실질적 합의가 미흡한 실정이고, 실질적인 협력 차원보다는 자국의 이익, 영향력 강화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이 ASEAN과 적극적인 FTA를 추진하자 ASEAN에서의 영향력 축소 등을 우려하여 2002년을 기점으로 양국간 FTA와 EPA를 발빠르게 추진 중이지만, EPA를 통해 ASEAN과의 경제관계를 확대·심화시키는 데 있어 ASEAN 국가들의 농수산물 및 인력 이동의 자유화 요구에 기술 협력·이전 등과 같은 미봉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대 ASEAN 경제협력의 노력은 FTA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EPA를 통해 ASEAN 국가들이 원하는 일본의 기술전수, 민간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실리주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FTA와 EPA 협상시 ASEAN 내에 존재하는 비관세장벽 등을 계속 부각, 투자와 서비스 분야에서의 지적재산권과 투자규범을 강화하여 일본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ASEAN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며 대ASEAN 경제협력의 수준과 속도를 조절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 3. 인도

ASEAN과 인도의 경제관계가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 인도가 본격적인 경제자유화 조치를 추진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92년 라오 총리가 발표한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은 ASEAN과 인도의 경제협력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인도의 이러한 대외정책의 변화는 역사적으로 긴밀한 동남아시아와의 유대관계를 강화·발전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ASEAN과 인도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십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사회·경제적 협력관계를 확대해왔고, 1996년에는 인도가 ASEAN 지역포럼 (ARF)에 참여해 정치·안보적 차원의 협력관계를 긴밀화하는 계기를 조성하

였다. 특히 ASEAN·인도 간의 경제협력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200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ASEAN 정상회의에 맞추어 인도 총리가 프놈펜을 직접 방문하고, 인도·ASEAN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키로 전격 합의 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이후 태국, 싱가포르 등 ASEAN 주요국과도 양자 FTA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되면서 인도와 ASEAN의 포괄적 경제협력관계의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

남남무역(South-South Trade)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ASEAN과 인도의 FTA 추진은 16억 명 인구를 보유한 거대시장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시장통합에 의한 무역창출효과는 물론 역내 분업구조 개편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sup>16)</sup> 주목되는 것은 최근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중국에 대한 ASEAN의 견제로서 인도와의 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ASEAN의 경우 인도를 전략적 파트너로 추가하면서 ASEAN+3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한 동남아와 동북아 간의 협력구도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가 2005년 12월 중순 개최된 제 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에 참여하면서 아시아 역내 경제통합의 허브(Hub)로서 ASEAN의 역할과 위상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추진되기 시작한 동방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인도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다각적인 협력관계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양자간 무역 촉진을 위해 태국과 무역공동위원회(Joint Trade Committee)를 구성하는 한편,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과도 공동위원회를 두고 무역 관련사항을 활발하게 논의하였다.

인도네시아와도 고위관리급에서 양자 경제 및 무역관계 전반을 협의하고 있으며, 미얀마와 양자 경제 및 무역관계를 검토하는 다양한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과 공동사업

16) ASEAN·인도 FTA 추진현황과 쟁점에 대해서는 권율(2006, pp. 47~53) 참고.

위원회(Joint Business Councils)를 설치하여 양 지역의 정부뿐만 아니라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려는 기업인 모두에게 유용한 포럼이 되고 있다.

이 외에도 양 지역간에는 정기적인 기업인 대표 교환프로그램과 무역전시회 참여 등의 형태로 지속적인 교류를 전개하고 있다. 또한 다자적인 측면에서 ASEAN과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인도와 ASEAN은 1992년 부분대화상대국(Sectoral Dialogue Partner)에서 1995년 12월에는 완전대화상대국(Full Dialogue Partner)으로 관계가 발전되었다. 1996년 7월 ASEAN 지역포럼(ARF)에 가입한 인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 및 발전에 대한 정치안보적 협력관계를 강화시켜 왔다.

그리고 2002년 이후에는 매년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인도·ASEAN의 협력 관계는 정치 및 안보, 경제협력, 개발협력 등을 통해 다양화되고, 과학·기술, 운송 및 인프라, 중소기업 등 각 부문별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협력사업이 논의되고 있다.

단계적인 경제협력 확대조치는 무역 및 투자 부문에서 상호자유화를 위한 논의로 구체화되면서, 1995년 2월 ‘ASEAN·인도 간 무역·투자 협력을 위한 전문가그룹’과 이를 계승한 ‘ASEAN·인도 무역·투자 작업반’으로 이어졌다. 또한 민간부문에서는 ASEAN 상의(ASEAN CCI)와 인도의 4개 주요 경제단체(FICCI, CII, ASSOCHAM, FIEO)를 중심으로 협력방안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특히 개발협력 부문에서는 무역·투자, 과학·기술, 인적자원개발, 관광, 운송 및 인프라, 보건, 중소기업, 농업 등을 주요 협력분야로 선정하여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2년 10월 인도는 인도·ASEAN 협력기금으로 250만 달러를 내놓고, 실질적인 협력사업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2001년 말 중국과 일본이 ASEAN과의 FTA를 거론하면서 인도·ASEAN FTA 논의도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2001년 당시 ASEAN과의 교역규모는 인도가 97억 달러인 반면 중국의 경우 416억 달러에 달해 중국을 의식한 인도의 ASEAN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피하였다.

이에 따라 인도는 2002년 9월 ‘ASEAN 경제장관회의’시 개최된 ‘ASEAN·

인도 협의회'에서 인도·ASEAN 간 자유무역 및 경제통합을 추진한다는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양측의 정부관계자 및 업계 대표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설치에 합의하였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내에 양국 공동대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2003년도 경제장관회의에 제출토록 하였다.

아울러 2002년 10월 뉴델리에서는 인도·ASEAN 비즈니스회의를 개최해 양 지역간 자유무역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협의한 바 있는데, 2002년 11월 프놈펜에서 개최된 제1차 인도·ASEAN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러한 논의들이 보다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당초 인도는 아시아지역의 경제협력체인 BIMSTEC<sup>17)</sup>, BOBCOM<sup>18)</sup> 등의 창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2000년에는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의 5개국과 「메콩·갠지스 협력사업(Mekong-Ganga Cooperaton Scheme)」이라는 새로운 협력포럼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 그룹은 인도가 동남아시아국가들과 맺고 있는 문화적 연계를 강조하면서 관광, 문화, 교육사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인도는 동방정책을 채택한 이후 동남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했으며, 이러한 인도의 전략이 보다 구체적으로 결실을 맺은 것은 2002년 11월 ASEAN과의 FTA 체결 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

2002년 11월 5일 인도와 ASEAN은 제1차 정상회의에서 향후 10년을 목표로 양 지역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함으로써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인도는 ASEAN 회원국 중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및 베트남 등 4개 저개발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대폭 인하함으로써 이 국가들과의 교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혀 ASEAN과의 자유무역을 위한 노력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17) '벵갈만 다부문 기술경제협력 이니셔티브(BIMSTEC: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은 1997년 6월 설립 당시 참가국의 이니셜로 이름을 지어 BIST-EC(Bangladesh, India, Sri Lanka and Thailand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으로 명명했으나, 1997년 12월 미얀마가 가입함에 따라 BIMST-EC으로 바뀌었고, 다시 2004년 2월 네팔이 가입함에 따라 현재의 BIMSTEC으로 개명되었다.

18) BOBCOM(Bay of Bengal community)은 SAARC 회원국에서 파키스탄을 제외하고 대신 미얀마와 태국을 추가한 공동체임.

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인도는 무역뿐만 아니라 ASEAN과 폭넓은 경제협력 관계를 지향하여 제1차 정상회담에서는 「메콩강 개발계획(Mekong Basin Development Cooperation)」 등 ASEAN 지역의 경제개발계획에도 적극 참여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한편 새로운 ASEAN 회원국에 대해 조기에 특혜관세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sup>19)</sup>

인도와 ASEAN은 발전적인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경제적 번영 외에도 안보와 반테러 연대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는 2003년 4월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5차 인도 · ASEAN 공동협력위원회(JCC)를 개최하여 국제테러 방지에 대한 공동협력방안을 논의하고, 2003년 8월 발리에서 개최된 제2차 인도 · ASEAN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또한 인도는 전격적으로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에도 가입하는 한편 포괄적 경제협력협정에 서명함으로써 ASEAN과의 FTA 추진에 공식 합의하였다.

인도는 1992년 라오 총리가 동방정책을 발표한 것을 분수령으로 ASEAN과의 경제협력에 박차를 가했다. ASEAN과 인도의 교역 및 투자관계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경제적 유대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2002년 개최된 제1차 인도 · ASEAN 정상회의를 통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FTA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ASEAN · 인도 FTA 체결 선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볼 때, ASEAN · 인도 FTA는 인도측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2001년 중국과 일본이 ASEAN과의 FTA를 거론하면서 인도는 ASEAN과의 FTA 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 ASEAN과의 교역규모는 인도가 97억 달러인 반면 중국이 416억 달러에 달했으며, 중국의 무역흑자폭은 해마다 증가하고

19) 제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주요 사항은 첫째, 인도 · ASEAN 정상회담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둘째, 정책입안자뿐만 아니라 양 지역간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 언론, 학계, 업계 등 다양한 계층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였다. 셋째, 인도 · ASEAN간 양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양 지역 Think-Thank 간 네트워크 개발을 지원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있었기 때문에 ASEAN과의 FTA를 비롯해 인도의 경쟁적인 FTA 참여는 중국을 의식한 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2002년 11월 프놈펜에서 개최된 ASEAN·인도 정상회담에서 FTA 추진을 공식 발표한 바 있고, ASEAN·인도 FTA 초안에 의하면 인도는 현재 조기관세인하 대상으로 100여 개 품목을 설정하여 2006년부터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2003년 10월 발리에서 개최된 ASEAN·인도 정상회의에서는 포괄적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현재 ASEAN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의 협력관계 강화정책은 중국, 일본의 관계에 대응한 상호 견제 및 균형유지라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ASEAN·인도 FTA는 비록 협정체결 기한을 10년으로 유보해 놓고 있지만, 최근 인도의 적극적인 FTA 추진 노력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 주요국과 쌍무적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지역간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 미치는 정치·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도는 2005년 12월 팔라렘푸르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도 참여하여 아시아 지역통합 움직임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당초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의 힘겨루기 양상이 치열해짐에 따라 ASEAN은 전략적으로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인도를 신규참여국으로 초청하였고, 이를 통해 인도가 아시아 역내 지역통합의 주역으로 전면 등장하여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역내 국가간 실질적인 협력관계와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고려할 때 ASEAN 10개국, 중국과 인도라는 신흥공업국과 한국, 일본, 호주 등이 포함된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통해 남아시아와 ASEAN 간 경제교류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SEAN·인도 FTA 추진에는 많은 장애요인이 있어 실질적인 FTA 발효에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 뚜렷한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집권당인 UPA 정부 출범 이후 FTA 추진정책에 다소 변화가 있었고, ASEAN과의 FTA로 우회수입을 우려한 인도는 원산지규정에 상당한 이견을 표명함으로써 FTA 시행이 지연되고 있음은 이를 단적으로 반영한다. 한편 인도는 ASEAN과의 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인도는 일반 품목

의 경우 기본최고관세가 30%에 이르고, 여기에 부가관세(보통 16%) 및 특별추가관세(4%)를 포함할 경우 총 관세율이 약 50%에 이르는 대표적인 고관세 부과국 중 하나이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 중 비교적 관세수준이 낮은 ASEAN과 FTA를 추진할 경우, 인도 국내산업에 미치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인도 내 산업의 피해는 보다 클 것이며 이로부터 강한 반발이 초래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ASEAN과의 FTA를 향후 10년간의 장기목표로 설정하고 있어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할 경우 국내 산업 피해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되겠지만, 인도의 평균관세율이 ASEAN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인도 업계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FTA 추진에 따른 업종별 영향은 산업별로 규정된 양 지역간 관세 격차에 따라 1차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향후 협상에서 산업의 개방과 보호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ASEAN과 인도의 FTA 협상은 양허안과 원산지규정에서 현격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면서 협상은 진전되지 않고 많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와 ASEAN이 결합하면 16억 명 인구의 시장에 GDP 규모가 1.5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 FTA가 탄생하게 되므로 남남협력 차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ASEAN에 대한 인도의 수출은 지난 몇 년 간 상당히 증가했으나 아직 100억 달러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라서 교역을 비롯한 경제협력의 제 분야에서 발전의 여지가 많다. 국내시장에 안주했던 인도 정부와 기업인은 시장개방보다는 ASEAN 시장을 활용해 비용 및 여타의 부존자원에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중점 생산하여 수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2007년 중 FTA 교섭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무엇보다도 시장확대를 통해 제품다양화 및 부가가치 창출 전략이 효과적으로 수립된다면, IT 분야,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도가 떠오르는 소프트웨어 강국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동남아 각국에게 기회와 도전이 될 것이고, ASEAN · 인도 FTA는 중장기적으로 가시적인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4. 호주 및 뉴질랜드

호주와 뉴질랜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ASEAN과 우호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호주는 1974년 제1차 호주·ASEAN 대화(Dialogue)를 개최하였고, 뉴질랜드는 1975년에 ASEAN과 대화(Dialogue)를 시작하였다. 1980년대 초 ASEAN과 호주의 정치·경제적 관계가 점차 긴밀하게 확대되고, ASEAN 회원국들의 경제적 환경이 급격히 변함에 따라, 점증하는 상품 수출에 따른 ASEAN 국가들의 호주시장 접근성 문제 등 경제적 이슈가 양자간 협의 현안 중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말 경제적 변화에 부합하고 ASEAN과 호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양자간 협력을 강화·확대하려는 노력이 다방면으로 시도되었다.

특히 호주의 경우 ‘ASEAN-호주 경제 협력 프로그램(AAECF)’을 통해 체계적으로 ASEAN에 대한 협력기반을 강화해 왔다. AAECF는 호주가 ASEAN에 대한 개발원조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현재까지 4개의 단계적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운영되어 왔다.<sup>20)</sup>

호주는 1974년 캔버라(Canberra)에서 열린 첫 번째 ASEAN·호주 포럼에서 ASEAN·호주 공동 프로젝트의 진행을 위하여 1974~1989년간 AAECF Phase I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프로그램 시행 초창기 때 주로 식량과 농업 부문의 연구·개발에 초점을 두었고, 1992년에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ASEAN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핵심사안이 과학과 기술 분야로 전환하였다. 1989~94년의 AAECF Phase II 기간 중에는 전자공학, 생명공학, 에너지 연구와 해저과학을 포함하는 프로젝트에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

1991년 14회 ASEAN·호주 포럼에서 상호관심분야와 혜택을 기반으로 하기 위하여 교육, 환경, 통신, 과학 기술과 같은 새로운 분야를 포함하면서 협력

20) 9,000만 호주 달러가 투입된 1974~1989년 시기, 3,300만 호주 달러가 투입된 1989~1994년 시기, 3,700만 호주 달러가 투입된 1994~2003년 시기, 그리고 2003년 이후의 4단계로 구분된다.

을 확대하는 데 합의하였다. 또한 1993년에 열린 15차 포럼에서 논의할 주제로 정치 및 안보 관련 이슈도 포함하면서 협력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1994년 7월 방콕에서 열린 27회 ASEAN 장관급 회담에서 개최된 AAECF Phase III하에 두 개의 협력적 메커니즘, 즉 협력사업(PSP: Projects Stream Programme)과 연계프로그램(LSP: Linkages Stream Programme)을 통해 ASEAN과 호주 간 무역과 투자 연계가 강화되었다. PSP 사업의 경우 상호합의된 우선부문인 환경, 전기, 통신과 식량 안전에 관한 장기적 기술 이전 프로젝트에 초점을 두고, LSP는 ASEAN · 호주 민간부문 네트워킹 활동의 주요한 촉진기제로 작용하였다. 이들 프로그램은 ASEAN · 호주 활동의 민간 참여를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LSP는 ASEAN과 호주에서의 민간, 연구, 학문, 정부 부문과 환경 관리, 운송, 생명공학, 통신, 정보기술, 농업과 농업기반 산업들을 포함한 주요 부문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였다.

1997년 8월에는 ASEAN과 호주, 뉴질랜드 간의 경제 · 정치 · 문화적 공존을 위하여 팔라룸푸르에서 최초로 ASEAN-호주-뉴질랜드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개발협력은 AAECF Phase III하에 문화, 사회 개발, 에너지 분야의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 2004년 ASEAN · 호주 dialogue는 30주년을 맞았으며, ASEAN은 이를 기념하여 ASEAN-호주-뉴질랜드 정상회담을 2004년 11월 라오스 비엔티안(Vientiane)에서 개최하였다. 이 회담에서 호주와 ASEAN, 뉴질랜드 간의 FTA 체결에 대한 협상을 2005년 초에 갖기로 합의하고, 개발 과제에 대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공표하였다.

2002년 9월 합의된 AFTA-CER 경제파트너십(CEP: Closer Economic Partnership)은 ASEAN과 CER 사이의 무역과 투자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CEP는 무역에서 기술적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능력 배양과 무역 및 투자 촉진 활성화, 기준 평가, 전자거래, 중소기업(SMEs)에 대한 지원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호주와 ASEAN 및 뉴질랜드의 경제적 관계에서 크게 작용하고 있는 AFTA-CER CEP는 담당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CEP 프로젝트를 추진하

는 과정에서 ASEAN과 호주, 뉴질랜드는 AFTA-CER Business Council(ACBC)를 설립하고, CEP 이니셔티브에서 비즈니스 부문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ACBC는 CEP 하에서 협력 우선순위 분야에 대한 사업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같이 양자간의 상호보완적 측면이 점차 확대되고 양국의 지역경제가 활력을 띠면서, 호주와 ASEAN의 파트너십이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1993년 호주와 ASEAN 간 담화 내용의 범위가 정치 및 안보 이슈로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다양한 정치·안보 포럼 참여를 통해 ASEAN과 호주 간의 우호적인 정치 관계가 발전되어 왔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ARF(ASEAN Regional Forum)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평화 유지에 대한 세션을 포함한 다수의 ARF 회담을 공동 개최해 왔다. 또한 매년 ASEAN PMCs(Post Ministerial Conferences)에 참여하여 지역 및 세계적 주요 이슈에 대한 서로의 관점을 교환하고 회담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호주는 2004년 7월 1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PMC+1 회의기간 동안 국제적인 테러리즘에 대항하기 위한 ASEAN·호주 공동협력선언(JDC CIT)에 서명하고, 양국간 정치·안보 분야의 협력을 공고히 한 바 있다. 이 선언에 서명함으로써 반테러리즘에 대한 양국의 지속적인 강한 연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4년 9월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다국적 범죄에 대한 ASEAN과 호주의 첫 회담에서 양국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ASEAN과 호주는 양국의 협력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제로 팔라렘푸르에 반테러리즘 동남아시아 지역 센터(South East Regional Center for Counter Terrorism), 인도네시아 법률 집행 센터(ILEC), 또는 방콕에 국제 법률 집행 에이전시(ILEA)의 설립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하였다.

이같이 호주와 ASEAN 간 정치·안보 분야의 관계는 매우 공고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고, 반테러리즘 관련 협력관계는 9.11 테러와 2002년 10월의 발리 폭탄테러 이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또한 호주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ASEAN 주요국과 함께 반테러리즘에

대한 MOU (Memoranda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였다. 2004년 2월에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반테러리즘에 대한 지역 장관급 회담을 공동 개최하였다. 호주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뉴질랜드, 영국이 가입한 FPDA(Five Power Defence Arrangements)에도 참여하고 있고, ASEAN과의 지역적 안보협력체제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양자간 안보 회담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한편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회원국 간 이견으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확정하지 못하던 ASEAN은 2005년 4월 필리핀 세부에서 개최된 ASEAN 비공식 외무장관회담에서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참여국 기준에 합의함에 따라 인도를 포함하여 호주와 뉴질랜드를 신규참여국으로 확정하게 되었다. ASEAN측이 합의한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참여국 기준은 △ ASEAN의 대화상대국으로서, △ ASEAN과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에 가입한 국가이어야 한다는 세 가지 조건이었다. 이에 따라 2005년 7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연례 ASEAN 외무장관회담(AMM)에서 이미 조건을 충족시킨 인도와 2005년 7월 TAC에 서명한 뉴질랜드, 2005년 12월 TAC 서명 의사를 밝힌 호주를 신규참여국으로 받아들일게 된 것이다. ASEAN+1 차원에서 매년 정상회의를 추진하면서 그동안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CER(호주 및 뉴질랜드)을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참여국으로 받아들임으로써 ASEAN은 자신을 중심축(hub)으로 한 지역협력구도를 확대·운영하고자 하는 전략적 의도를 실현하게 되었다. 즉, 중국이 제안한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조기개최에 대응하여 ASEAN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참여국 확대라는 카드를 내 놓고, ‘확대 ASEAN+3 정상회의’ 형식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다. 당초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에 적극적 태도를 취하고,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은 유보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입장차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ASEAN 국가들은 최종적으로 중국이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도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호주와 뉴질랜드를 신규참여국으로 전격 합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ASEAN+3 협력체제의 중장기 사업으로 제시되었던 동아시아 정상회의 구상이 당초 의도를 벗어나 호주와 뉴질랜드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여하게 되고, ASEAN으로서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역내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뉴질랜드와 호주를 신규참여국으로 받아들이는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1970년대 중반 이후 ASEAN이 호주 및 뉴질랜드와 발전시켜온 협력관계가 크게 작용하였고, 상호보완적 경제체제의 안정화와 무역관계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호주와 ASEAN 간의 무역과 투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뉴질랜드는 싱가포르와 2000년 경제연대협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을 체결하였고, 2005년 7월 뉴질랜드·태국 FTA 발효되었다. 호주의 경우에도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여 2003년 7월 발효되었고, 태국과의 FTA는 2005년 1월 발효되었다. 현재 호주·뉴질랜드·ASEAN FTA는 2005년 2월 협상 개시 이래 협상중인데, ASEAN 국가들의 경제적 격차와 개방수준이 상이하여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2007년 말을 목표로 협상속도를 높이고 있는 중이다. 호주·뉴질랜드·ASEAN FTA는 역내 경제적 통합을 강화하고, 이미 체결된 호주-싱가포르 FTA와 호주-태국 FTA, 협상중에 있는 호주-말레이시아 FTA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 5. 미국

미국은 전통적으로 역내 안정과 세력균형에 역점을 두면서 ASEAN과의 협력기반을 강화시켜 왔고, 경제적으로는 동남아국가들과의 교역 및 투자 증진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다. ASEAN은 1977년 마닐라에서 처음으로 양국의 번영과 지역적 특성 이해를 통한 관계개선을 목적으로 양자간 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이후 1차상품과 시장, 자금 유입, 다국적기업 출현, 기술 전수, 에너지자원 개발, 선적과 식품안전 등에 초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회담을 개최해 왔다.

특히 미국은 1979년 이후 정기적으로 ASEAN의 PMC(Post-Ministerial Conferences) 회의에 참석하였고, 1980년대 중반부터 ASEAN과 미국의 관계에 몇 가지 중대한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양국의 협의 내용이 처음에는 경제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점차 외교 · 정치 · 안보 분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양자간 회담의 본질과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

ASEAN 내에서 경제개발과 공업화가 본격화되고, 미국이 개발협력 부문에서 중점을 두는 사안들이 이전과 달라지면서 미국의 대ASEAN 필수품 원조가 감소하는 대신, 지역협력과 인적자원 개발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 사업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즉 1983년 ASEAN · 미국 간 5차 회담이 마닐라에서 개최되어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교환하였는데, 기술이전에 대한 원조와 양국 비즈니스 부문의 상업 연계, ASEAN 사업가 교육, 이 분야에 대한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 들어 미국과 ASEAN 간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교섭이 진행되었고 무역과 투자, 기술 전이 및 인적 자원 개발에 주력키로 하여, 기존의 단순한 지원에서 벗어난 진정한 협력 차원의 교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민간부문은 양국의 개발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양자간의 네트워크 형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ASEAN 회원국에서 경제적 활동을 유도하는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이 1990년대 이후 미국과 ASEAN 간의 교역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ASEAN · 미국 간의 회담에서 정치안보, 개발협력 문제 외에도 무역과 투자 협력, AMG (Alliance for Mutual Growth)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1980년대에 필수품 원조에 주력하던 양국 관계가 정치 · 안보 협력단계를 거쳐 2000년대에 교역과 투자를 통한 경제협력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최근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대한 의견교환도 무역 및 투자위원회(TICC), The AEM-USTR consultations, the ASEAN-Washington

committee 같은 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ASEAN과의 경제협력뿐 아니라 ASEAN이 주도하는 ARF, 9+1, 9+10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치·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아태지역의 테러 가능성을 제거하고 국제 질서의 다극화를 모색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증가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ASEAN에 진출한 미국회사들은 ASEAN 경제통합에 따른 이득을 보고 있으며, 차후 일본 및 한국과 ASEAN의 연계를 통하여 더욱 큰 내수시장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는 분명 미국정부가 ASEAN과의 지속적인 경제공조를 유지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시사한다. ASEAN의 경제부 장관과 미국 통상부 대표는 2002년 4월 방콕에서 열린 회의에서 양국간 투자와 무역을 확대하는 프로그램 도입에 서명하였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은 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지식재산권과 생산 기준, 정보통신기술, 중소기업과 생물공학 분야로 협력범위를 넓혔다. 또한 장관들은 미국·ASEAN 사업위원회(Business Committee)에서 제안한 미국·ASEAN FTA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키로 하였다. 이전부터 양국의 FTA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ASEAN·US, ASEAN 회원국·미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FTA 체결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급속히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ASEAN 회원국 중 태국은 미국과 일찍부터 FTA 체결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세계 최대의 내수시장인 미국시장 확보를 통한 경제성장 촉진, ASEAN에서의 FTA 주도국을 목적으로 여섯 차례 협상을 추진한 바 있다. 미국은 대 ASEAN 무역전략인 「ASEAN 이니셔티브 사업(Enterprise for ASEAN Initiative)」을 통하여 ASEAN과의 교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를 미국·ASEAN FTA를 위한 기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2년 미국과 ASEAN은 경제적·정치적·안보 차원에서 양국간 관계의 긴밀성과 공조를 재확인하였으며, 당해 8월 미·ASEAN 반테러협정에 서명하여 안보와 정치적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정치·안보 차원의 양국 관계는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과 동아시아에 만연한

SARS를 겪으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에 대한 ASEAN의 입장은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가 미국편에서 이라크 전쟁에 동조한 반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나머지 ASEAN 회원국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비난하거나 침묵함으로써 명확히 구분되고 있다.

미국 · ASEAN 협력관계의 제도적 기반은 ASEAN 국가들이 발의하고 주도하는 ASEAN 지역안보포럼(ARF)으로, 이는 통합적인 미국식 안보체계 확립을 위한 미국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특히 ARF는 동아시아 · 환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를 긴밀하게 상의하기 위한 회담으로, 각국의 외교적 ·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토론장으로서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ASEAN 장관급 회담에 이어 바로 개최되는 PMC 과정에서 미국의 참여는 양국의 교류 및 대화 진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PMC 9+1과 9+10 회담은 미국정부가 ASEAN 외무부와의 외교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안보, 경제, 개발 협력 이슈를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 초기 미 국무부의 파월 장관은 각각 ARF와 PMC에 적극 참여하여 왔으며, 졸릭(Zoellick) 대사 역시 3년 주기로 USTR · AEM를 소집하여 미국 · ASEAN 경제관계 촉진을 추진하여왔다. USTR · AEM 회담은 미국 · 싱가포르 FTA의 성공적인 결론에 의거한 무역자유화 혁신정책과 미국 · 태국 FTA 협상 및 차후 가능한 ASEAN · 미국 간 FTA 가능성 제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외에 정기적으로 ASEAN의 SOM leader와 미국 아태지역 담당 비서관이 참여하는 토론회담을 개최하여 양국간의 정치, 안보, 경제, 기능 개발 협력활동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경제 분야에서 미국은 대ASEAN 무역전략인 ‘ASEAN 이니셔티브 사업’을 제도적 기반으로 하여 ASEAN을 개별 국가가 아닌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무역 증진 및 내수시장 확보, 성장 촉진, FTA 발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ASEAN과의 새로운 무역협력방안으로 “the Enterprise for ASEAN Initiative (EAI)”를 발표하였다. EAI를 통한 미국과 ASEAN의 협력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개발에 일조하고 있고, 무역과 투자를 증가시킬 양자 FTA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미국과 ASEAN의 경제협력 증진에 목표를 두고 있다. EAI는 양자 그리고 지역적 협력은 물론 APEC의 아태지역 자유무역과 투자를 위한 보고르(Bogor)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2006년 8월 말에는 미국과 ASEAN 10개국이 말레이시아 콰라룸푸르에서 무역과 투자, 정치적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5개년 협정에 서명하였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시에드 하미드 알바르 말레이시아 외무장관 등 ASEAN 10개국 외교장관은 이날 콰라룸푸르 컨벤션 센터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할 ‘미국·ASEAN 동반자관계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에 합의하였다. 이 협정은 2005년 11일 부산에서 열린 APEC 회의 때 미국과 ASEAN 양측이 만나 합의한 것이다. 이 협정은 정치, 안보,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양측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안보 측면에서는 미국과 ASEAN은 정상 회담 개최를 모색하는 한편, 테러 등 국제 평화와 안보 문제에 관해 양측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면에서 미국·ASEAN 양측은 ‘ASEAN 사업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양측의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와 같은 경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양측의 재정적 협력방안과 강화된 지적재산권 보호장치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은 양자간(bilateral) 관계에 지속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동남아시아에서 양자간 및 다자간의 혼합된 관계체계를 추진해 왔다. 2003년 10월 부시 미국 대통령의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방문은 미국과 ASEAN의 공고한 관계를 보여준다. 특히 테러 진압을 위한 전쟁에서 필리핀과 가장 긴밀한 양자간 관계를 맺었으며, 민다오(Mindao)의 아부사야프(Abu Sayyaf) 집단을 진압하기 위한 방편으로 필리핀의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미국 군대 원조와 교육이 실시된 바 있다. 비록 미국이 필리핀 군대가 치르는 모로이슬람 해방전선(MILF: Moro Islamic Liberation Front)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지만, 필리핀 군대에 대한 미국의 원조가 MILF와의 전쟁 및 진압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다자간 측면에서 보면,

ASEAN이나 ARF가 주도하는 지역 내 주요한 안보 이슈, 즉 대외적인 폭동 지원, 다수의 난민 유입, 일부 지역의 독립 논쟁 등에 미국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미국과 ASEAN의 협력과 공존은 미국의 대테러 전략과 함께 각종 군사 협력과 정보교류를 통해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에서의 호응을 기반으로 우호적인 동반자 관계를 통하여 미국 주도의 통합안보체제가 동아시아에서 공고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ASEAN도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안보 및 정치 분야의 공조성을 높이고, 발리 참사와 같은 테러 방지를 위한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향후 동아시아 지역 내 발언권을 제고하고자 미국과의 협력기반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과 함께 동남아가 중국의 영향력으로 편입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통합이 투명하고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역내에서 중국의 급속한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있어 이는 미국의 동남아 전략에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4년 ASEAN+3 국가들이 EAS의 조기 개최 결정시 중국 주도의 EAS를 우려한 미국은 직접 참여 의향을 피력하기도 했는데,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주변국의 참여가 결정됨에 따라 입장을 바꾸어 현재는 관망하겠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미국의 EAS 참여는 회의적이나 EAS 가입의 전제조건인 TAC 조약상 내정불간섭 조항이 미국의 외교정책수단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아직 정체성도 뚜렷하지 않은 EAS에 대해 가입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기존의 APEC 위상을 새롭게 재정립하고, 정치·안보적 협력기반 강화에 역점을 두면서 APEC 안보기구화 방안이 재점검되는 등 아태 지역 중심의 지역통합을 강조하면서 동남아국가들과의 협력기반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 제5장

## 통상전략 및 분야별 협력 확대방안



## 통상전략 및 분야별 협력 확대방안

### 1. 기본방향

#### 가. ASEAN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그동안 ASEAN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와 역내 분업 촉진에 목적을 두고 ASEAN 자유무역지대(AFTA)를 강화·발전시켜 왔다. ASEAN은 외환위기 이후 관세인하 계획을 앞당기는 등 역내 경제통합을 가속화하면서 2006년 기준으로 인구 5억 7,000만 명, GDP 1조 달러 규모의 단일시장으로 급부상하였다.

현재 ASEAN은 한국의 5대 교역지역, 3대 투자지역으로서 경제적인 긴밀성이 높고 석유, 천연가스, 고무, 목재 등 주요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원공급원으로서도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말라카 해협으로 이어지는 동남아 인근 연안은 주요 자원의 공급루트로서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즉 우리와 EU 간 교역, 아·중동으로부터의 자원 수입 등이 동남아 해안을 거치는 등 ASEAN은 우리의 석유자원 공급루트에 위치해 있으므로 안정적인 교통망 확보를 위해 ASEAN과의 우호협력관계 유지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지경학적 중요성 외에도 한·ASEAN 관계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동아시아 역내 협력구도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전략적 고려다. 최근 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이 촉진되면서 ASEAN을 매개로 한 ASEAN+1 차원의

FTA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ASEAN이 외환위기 이후 주변 경제권과의 FTA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동북아 3국은 물론 인도, 호주 및 뉴질랜드와도 FTA 추진에 합의함으로써 역내 협력구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표 5-1. 아시아 역내 협력구도와 FTA 추진 현황 ▮

국 가	진행 상황
중 국	ASEAN · 중국 FTA 2005년 7월 발효
일 본	일 · 싱가포르 FTA 2002년 11월 30일 발효 일 · 필리핀 FTA 2006년 9월 협정 서명 일 · 브루나이 FTA 2007년 6월 협정 서명 일 · 말레이시아 FTA 2006년 7월 13일 발효 일 · 인도네시아 FTA 2007년 8월 협정 서명 일 · 태국 FTA 2007년 11월 1일 발효 일 · ASEAN FTA 2007년 10월 FTA 10차 협상
인 도	ASEAN · 인도 2002년 11월 FTA 추진 합의, 협상 중 인도 · 싱가포르 FTA 2005년 10월 발효 인도 · 태국 FTA 상품협상 중 (82개 품목 조기자유화)
호 주	호주 · 싱가포르 FTA 2003년 7월 발효 호주 · 태국 FTA 2005년 1월 발효 호주 · 뉴질랜드 · ASEAN FTA 2005년 2월 FTA 협상 개시
뉴질랜드	뉴질랜드 · 싱가포르 Closer Economic Partnership 2000년 체결 뉴질랜드 · 태국 FTA 2005년 7월 발효
한 국	한 · 싱가포르 FTA 2006년 3월 발효 한 · ASEAN FTA 상품협정 2007년 6월 발효 한 · ASEAN FTA 서비스협정 2007년 11월 서명

주: 2007년 11월 말 현재 FTA 체결 혹은 발효 기준(공동연구는 제외).

자료: 필자작성.

ASEAN은 1990년대 초반 중국이라는 거대시장과 투자유치 경쟁을 위해서 개별국 차원이 아닌 ASEAN 전체 시장을 통합함으로써 ASEAN 10을 실현하였다. ASEAN에 대한 투자매력을 극대화한다는 전략하에 ASEAN 확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AFTA 플러스를 통한 경제통합 수준을 심화시켜 왔고, 「발리협약 II」를 통해 ASEAN 공동체라는 중장기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써 경제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 같은 ASEAN 경제통합의 심화와 확대에 대응하여 중국과 일본은 물론 최근에는 인도까지 나서서 동남아 경제권과의 관계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03년 10월 발리에서 개최된 제7차 ASEAN+3 정상회담에서 중국, 일본, 인도가 각기 포괄적인 협력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아시아 지역경제통합에서 AFTA는 FTA 허브(hub)로 급부상하게 되었다(표 5-1 참고).

현재 ASEAN을 축으로 중국, 일본은 물론 인도 등 주변국가가 ASEAN+1 차원에서 각기 FTA를 포함한 사회·문화적 협력기반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안보적 차원에서도 중국, 인도, 일본이 각기 동남아우호협력조약에 전격 가입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ASEAN 정책도 보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협력방향과 대응전략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ASEAN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기존의 통상외교를 개별국가 차원에 한정하지 말고, 지역공동체로서 ASEAN의 정치·경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외교적 대응이 절실하다. 그동안 추진되어 온 ASEAN+3 협력체제에서 나타나듯이 동아시아 역내 문제 논의에서 ASEAN은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매개로 역내 수퍼파워인 일본과 중국에 대해 동등한 지위를 확보해왔다. 앞으로도 ASEAN+3 체제는 역내 국가들과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주요 기제로서, 동아시아 지역문제에 대해 ASEAN과 연대하여 우리의 발언권이 제고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한 역내 채널이라는 결정적 의의를 갖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한반도 4강 위주의 정책과 동북아 중심 국가 전략은 ASEAN과의 협력기반을 통해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동남아 경험정책의 기초를 ASEAN과의 관계긴밀화에 보다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우회적 지역주의는 동남아국가들과의 상호 연대하에 동아시아 역내 문제에서 우리의 이익이 배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ASEAN+3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추면서 ASEAN+3 협력체제를 통해 주요 경험대

상지역으로서 ASEAN과의 관계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고, ASEAN과의 연대를 전략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 나. 대ASEAN 통상외교 강화

우리의 대동남아 진출은 1980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선진국 우회수출기지’로 부각, 국내 사양산업의 대거 이전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및 국내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중점 경협대상지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동남아의 높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구매력이 높아짐에 따라 현지 내수시장을 개척하려는 시장지향적 투자가 강화된 바 있다. 특히 가전제품,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기존의 일본시장을 잠식해 들어감에 따라 치열한 경합관계를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대동남아 진출 시점에서 일본에 크게 뒤처졌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진출선점 효과가 큰 베트남, 미얀마 등 주변국으로의 진출이 강화되었고, 부분적으로 현지 내수시장 확대를 공략하기 위한 전자·전기 등 대규모 장치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였다.

수출유발 효과가 큰 투자확대에 힘입어 ASEAN은 1990년대 초반 이후 미국, 일본, EU에 이어 우리의 제4대 교역대상지역으로서 대외 총교역액의 10% 이상을 차지해왔다. 금융위기 이전 수출의 경우 1992년 90.1억 달러에서 1996년 203.7억 달러로 2배 이상 확대된 바 있고, 수입의 경우 1992년 71.1억 달러에서 1996년 120.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교역수지는 1992년 19.0억 달러에서 1996년 82.4억 달러로 흑자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ASEAN은 우리나라의 주요 흑자시장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한·ASEAN 간 총교역은 크게 격감하여 1998년 244.6억 달러로 감소한 바 있으나, 점차 회복 국면으로 전환하여 2000년에는 383.1억 달러로 교역규모가 증가하였다. 1992~98년 대ASEAN 총교역에서 연평균 16.1% 성장(수출 10.1%, 수입 5.5%)을 기록하고, 외환위기 이후 1999~2001년 동안 대ASEAN 총교역은 연평균 8.9% 성장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발생 이후 교역기반이 붕괴되면서 수출입이 모두 급감하고, 투자 진출도 현저히 약화되면서 현지생산 및 판매 기반 축소로 흑자폭이 크게 감소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 80억 달러에 이르던 대ASEAN 흑자는 2001년 5.4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하였고, 2002년 16억 달러로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앞으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ASEAN이 한국경제에 차지하는 실제적 비중이 미국, 중국, EU에 이어 넷째로 컸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외교적 측면에서 ASEAN에 대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었다. 대ASEAN 정책은 경제적 실익을 앞세운 단기적 시각에 한정되었고, 중국과 미국 시장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전략적 입장을 취하지 못했다.

중국과 일본이 발빠르게 ASEAN+1 차원에서 2003년 체결한 포괄적 협력협정과 동남아 우호협력조약은 향후 우리나라의 대ASEAN 통상정책에 큰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욱이 ASEAN 국가들의 경제성장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한국과 ASEAN 국가 간의 무역마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한국의 교역 중 10% 이상을 차지하는 대ASEAN 교역의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ASEAN FTA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과 경쟁적으로 추진되던 중·ASEAN FTA는 2005년 7월부터 발효되었는데, 중국과 ASEAN의 경제의존성이 높아질 경우 그동안 구축된 한국과 ASEAN 간의 분업체제는 큰 타격을 입게 되고, 황금알을 낳았던 동남아 시장은 중국의 절대적 영향력에 놓일 것이 자명하다.

이에 따라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은 역내에서 중국과 ASEAN 간의 시장통합에 수반되는 무역전환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으로 적극 추진되었다. 그러나 중·ASEAN FTA의 경우 민감품목 설정에서 품목기준 상한선만 10%로 규정되어 무역규모와 상관없이 주요 품목이 초민감품목으로 설정된 결과, 중국과 ASEAN 상호간 실질적 시장개방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반면 한·ASEAN FTA의 품목별 양허안 협상에서는 수입품목 및 수입액 상한선이 각각 10%로 설정되어 자동차, 철강 등 주요 관심품목의 양허수준이 높아져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더욱이 주요 농림수산물 중의 경우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됨으로써 쌀, 고추, 마늘, 닭고기, 합판, 활어, 냉동어류 등 40개 품목은 양허안에서 제외되었다. 나머지는 소폭의 관세인하로 시장개방을 최소화하였는데, 우리나라 농업 부문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가장 의미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논란이 되어왔던 상품양허안이 최종 합의됨에 따라 2010년까지 품목 수 및 수입액 기준으로 일반상품의 90%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고, 2016년까지 초민감품목 3%를 제외한 나머지 7%의 품목도 0~5%의 관세수준으로 인하되면, 향후 시장개방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이 2007년 6월 발효되었고, 2007년 11월 서비스협정도 체결되었다. 조만간 투자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ASEAN은 중국에 이어 중점 경협대상지역으로 그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우려되고 있는 중국투자 일변도의 ‘쏟림 추세’를 완화시키는 데도 적지 않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투자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현지투자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ASEAN 지역 전체의 사업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으로 진출기업과 유기적인 정보교환 및 협의 확대를 위한 제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종 제도 및 운용은 물론 각국의 비관세장벽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해 ASEAN과 개선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한국업체에 실질적으로 유리한 투자여건이 조성되고 각종 투자애로사항 및 현지경영의 제약요인들이 적절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ASEAN과의 체계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제·통상장관회의와 고위경제·통상관리 간 협의채널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치·외교적으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대표부를 설치하거나

ASEAN 사무국 등에 전담요원을 파견하여 대ASEAN 통상정책을 한층 격상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단일 시장화하고 있는 ASEAN과의 협력채널을 강화하기 위해 EU와 같은 ‘ASEAN 무역대표부’ 혹은 이와 유사한 통상대표기관을 설치하는 문제를 고려해볼 수도 있다. 특히 2007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1차 한·ASEAN 정상회의에서 통상 및 관광협력 증진을 위한 ‘ASEAN 협력센터’ 설립협정이 체결되었는바, 앞으로 한·ASEAN 협력사업 추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2. 중점 추진과제

### 가. ASEAN 협력사업의 효율적 조정과 관리

중국과 일본이 ASEAN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ASEAN도 협상력 강화를 위해 중국과 일본에 대하여 각각 ASEAN+1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현재 한국은 ASEAN과의 제도적 협력기반 구축에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2003년 발리에서 개최된 한·ASEAN 정상회의에서 우리 측 제안으로 한·ASEAN 대화관계 수립 15주년인 2004년 공동선언이 채택된 바 있다. 「공동선언」은 한·ASEAN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기본틀과 미래 협력방향으로 정치안보분야의 협력 외에도 △ 포괄적 경제협력의 기반 마련 △ 개발격차해소 △ 경쟁력 강화 및 지식기반경제 양성 △ 사회복지 및 상호이해 증진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 역내 및 국제 협력 제고 △ 아시아통합 심화 등 경제협력 관련 정책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이 공동선언에서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대ASEAN 협력강화방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

서 공동선언에서 제시한 협력 이슈와 중장기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 후속 조치로 우리의 대ASEAN 중시 입장 반영을 위해 2005년부터 한·ASEAN 경제협력사업 지원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하고, 현재 ASEAN+3 정상회의를 계기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ASEAN 정상회의에서 협력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ASEAN 협력사업의 전략적 운용체제 구축이 시급하고, 개별 국가 차원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조정·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의 대ASEAN 경제·통상 외교는 ASEAN측 요구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중·일의 대ASEAN 정책에 반사적으로 대응하여온 바, 우리의 대ASEAN 경제·통상 외교가 소극적이라는 인식이 ASEAN 전체에 일반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ASEAN의 신뢰를 확보하고 ASEAN내 우리의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 능동적인 대ASEAN 협력사업 발굴과 체계적인 사업추진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ASEAN측의 적극적인 지원요청에 의해 방만하게 추진하고 있는 제반 ASEAN 협력사업을 정리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과적 사업추진체제를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현재 한·ASEAN 협력기금 사업은 지원금액이 300만 달러로 증액되어 추진사업 수가 연간 10여 개로 점차 늘어나고 있고 KOICA의 ASEAN 지원비중도 연간 20%에 달해(2005년의 경우 3,828만 달러), 사업간 차별성과 효과성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ASEAN+3 정상회의, ASEAN+3 관계부처 장관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협력채널이 중첩되면서 각종 제안사업 간의 중복성이 확대되고, 유사사업 및 일회적 행사성 사업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ASEAN FTA 경제협력사업의 경우 19개 분야, 69개 사업이 책정되어 있는바, 기존 ASEAN 협력사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한·ASEAN FTA의 원만한 추진체제가 필요하다. 특히 FTA 이행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제반사항을 민간부문의 현실적

요구에 조응시키려면 민간부문과의 협의채널이 필수적이고, 업계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민간부문의 요구를 수렴함으로써 FTA 이행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남아에 대한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고,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위상에 적합한 협력프로그램을 설정하여 4~5년의 중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인 이행방안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선정하되 ASEAN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해야 한다.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등 주변 경쟁국의 경우 ASEAN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로 경쟁적으로 대동남아 친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주변국의 대응을 고려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기적인 협력사업보다는 동남아 각국에 신뢰감을 주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포괄적인 협력체제하에서 동남아 외교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상호호혜적인 차원에서 실리를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외교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정책조정을 해야 한다. 특히 중국, 일본과는 달리 명분보다는 실속있는 사업추진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대ASEAN 협력강화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ASEAN 협력관계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향후 동남아국가들과의 경제협력관계를 보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전략적 안목이다.

둘째, ASEAN의 협력요구에 기초하면서도 종합적인 체계적인 협력사업 추진체제가 필요하고, 다양한 협력사업 간의 연계성과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경제통상외교 측면에서 정책적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대ASEAN 지원은 ASEAN 개별 국가와의 협력 사업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ASEAN이 원하는, ASEAN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협력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개별 사업 중심에서 보다 정책적 관점을 강화하여 ASEAN과의 경제통상 외교 확대라는 정책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

는 종합적인 운영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한·ASEAN 정상회의, ASEAN+3 정상회의, 한·ASEAN FTA 경제협력사업 등 ASEAN을 매개로 한 협력체제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한 민간부문의 참여와 연계가 취약하다. 우리나라와 ASEAN 국가간 교역·투자 및 관광 교류가 매년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ASEAN 국가들에 대한 적절한 수출정보 지원, 현지 시장에 대한 정확한 투자정보 제공 등 한·ASEAN 협력관계 강화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부문과의 상호연계를 강화하여 ASEAN과의 통상협력기반 강화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 나. 한·ASEAN 산업협력기반 확대

동남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동기는 무엇보다도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 확보와 함께 선진국의 보호장벽을 피하기 위한 우회수출기지 확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ASEAN 역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하고 노동력이 풍부한 국가들에 대한 우리 진출 기업들의 투자분야는 주로 노동집약적 산업에 집중되어 있고, 진출기업도 주로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베트남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기업의 진출열기가 가세하면서 투자진출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2007년 한국은 일본, 싱가포르 등을 제치고 베트남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했다. 한국에게도 중국, 미국에 이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3위와 4위를 차지하는 유망 투자대상국이다. 이는 중국시장이 과열되면서 원가절감형 투자의 적격지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부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시장잠재력과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ASEAN 역내시장은 물론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진출교두보로서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베트남의 최저임금은 약 54달러에 불과하고, 노동집약적 산업의 인건비가 중국보다도 30~40%의 저렴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진출경쟁은 보다 가속화

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잠시 위축되었던 동남아에 대한 직접투자는, 안정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한 동남아국가들의 경제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한편 구매력이 증대되고 있어, 현지시장 개척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기업의 동남아 현지생산은 생산설비와 소재 및 부품을 모기업으로부터 수입하여 현지에서 조립 또는 가공생산하여 수출하는 현지생산의 초기단계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동남아 진출기업들은 원·부자재 조달의 어려움, 자체 브랜드 개발에 소극적이어서 내수시장 진출에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국제분업체제하에서 다국적기업들의 기업분산과 조정능력 제고, 생산집적 효과에 의한 규모의 경제성과 외부효과를 통한 생산비용이 낮아지고 있어 기업활동의 글로벌화에 의한 경쟁은 보다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지조달 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기술, 경영, 브랜드 등 자체적인 경쟁우위요소를 보유하지 못하고 동남아 투자진출이 지속적으로 확대할 경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투자에 따른 생산활동의 해외 이전과 무역의 관계에 대한 동태적인 이해가 중요하다. 동남아에서 보편적인 원가절감형 투자 혹은 생산효율형 투자의 경우 진출 초기에는 수출유발 효과가 높아 무역흑자를 발생시키지만 중장기적으로 현지화에 의해 수출대체 효과가 커진다면 우리나라 흑자폭이 점차 줄어든다. 따라서 성장잠재력과 소비시장 확대에 대비한 시장진출형 투자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일본, 서구의 주요 다국적 기업들은 통합적 세계 전략을 통해 고도의 분산과 조정으로 이루어진 다국간 생산체제를 기반으로, 생산요소비용 절감은 물론 직접투자의 집중을 통한 생산 및 유통체제를 발전시킴으로써 현지조달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ASEAN 역내 공정 간 분업을 실현하여 생산비용을 크게 절감시키고, 금융위기 이후에도 동남아국가들과의 산업협력기반을 강화하고 부품산업 표준화 등을 이루어 기업의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의 경제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한·ASEAN 산업협력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중층적인 분업관계와 경제구조의 상호보완성에 기반하

여 역내 경제통합에 보다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ASEAN과의 경제 협력 기본방향을 동남아 시장통합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이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ASEAN의 경제통합수준은 관세인하 및 철폐 단계에 불과하나 점차 투자·서비스 부문의 자유화가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한·ASEAN FTA 추진으로 인해 생산거점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크게 확충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면밀한 사전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ASEAN은 지속적으로 단일시장을 활용한 외국인투자 유치 및 역내국 간 합작투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생산기반을 유지하면서 중국시장 일변도에서 투자진출 다변화를 통한 상대적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ASEAN과의 분업관계를 고려할 때 ASEAN과의 FTA로 역내 경쟁이 심화되면서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자본재 및 중간재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ASEAN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분야(신발, 의류 등 노동집약적 부문, 통신기기, 전자기기)에서는 ASEAN 역내로의 현지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비교우위산업의 내수지향형 투자와 공정간 분업체제 구축을 통해 중간재와 부품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즉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이나 대만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ASEAN 투자를 늘리고 있어 이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품 차별화와 더불어 원가절감을 위해 현지진출 기업간 분업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동반진출은 대기업의 경우 부품 조달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게 해주고, 중소기업의 경우 취약한 해외마케팅을 비롯한 해외 경영능력과 자금조달상의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은 ASEAN보다 산업발전단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므로 역내 분업에서 당분간 우위를 유지할 수 있고, 특히 교역면에서 상호보완성이 높아 유리한 여건을 지니고 있다. 한국이 수출하는 공산품은 ASEAN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중심의 1차상품보다 가격탄력성이 높은 경향을 지니므로 수입확대보다

는 수출확대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현지투자진출과 수출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한·ASEAN FTA라는 제도적 기반을 활용해 보다 치밀하게 마련되고,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기 위한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을 통해 전략적인 글로벌 통상전략이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산업협력기반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 다. 비관세장벽의 철폐

2007년 6월부터 발효된 한·ASEAN FTA 상품협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ASEAN의 비관세장벽의 완화 및 철폐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ASEAN 현지의 진출기업 대표자회의를 통해 기업들의 교역 및 투자 애로요인을 조사하고, 정보교환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개별 기업들이 교역 및 투자 시 직면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과 투자장벽을 유형화하고, 미시적으로 개별 사례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조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ASEAN의 경우 AFTA 출범 이후 10년 이상 역내국간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해 노력해왔다. ASEAN 사무국은 APEC, WTO, UNCTAD 등 국제기구의 연구자료와 회원국 업체의 신고 등을 통한 실사조사를 활용, 사례를 발굴하여 총 1,859개 품목을 NTM Database의 형태로 2004년 8월 공표한 바 있다. [표 5-2]에 따르면 수입제한조치 869건, 기술장벽 785건, 수량제한(쿼터) 96건, 추가적인 세금 및 수수료 50건 등에서 비관세장벽이 많이 존재하고, 그밖에 수입가격 통제 34건, 독점적 수입채널 25건, 기타 12건으로 나타나 있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가 365개로 가장 많고, 라오스 301개, 베트남 293개, 브루나이 210개, 필리핀 177개, 태국 132개, 말레이시아 130개 등이다.

현재 ASEAN은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거나 완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우리의 대ASEAN 진출업체 및 주요 수출업체와 공조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별 NTB 리스트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ASEAN의 비관세장벽 현황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는 추후 ASEAN과 FTA 이행위원회에서 비관세장벽 부문 논의 시 향후 민간부문과 연계하여 대ASEAN 주요 수출업체 및 진출기업과 공조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례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한·ASEAN FTA 추진에서 비관세장벽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경우 ASEAN 측에서 제기할 SPS가 민감한 문제라면 현재 진행 중인 투자협상에서 ‘무역·투자환경 개선위원회(가칭)’의 설치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 진출에 투자장벽 문제를 연계하여 보다 폭넓게 비관세장벽 문제를 다루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 표 5-2. ASEAN의 비관세장벽 현황(2004년, 1,859개 품목) ▮

Non-tariff Barrier 분류		해당 관세라인	
수입제한 조치	Import License	579	869 (46.8%)
	Import Permit & Approval	69	
	Import Prohibition	221	
기술장벽	Testing & Inspection	45	785 (42.2%)
	Requirement & Resistration	104	
	Labelling, Marking, Packing Requirements	120	
	Regulations & Standards & Certification	516	
수량제한(쿼터)	Quota	86	96
	Tariff Quota	10	(5.2%)
추가적인 세금과 수수료	Additional taxes & Customs surcharges	39	50
	Excise Duties	11	(2.7%)
수입가격 통제	Administrative price fixing of import prices	34	34 (1.8%)
독점적 수입채널	Single Channel for Imports	13	25
	State-trading Administration	12	(1.4%)
기타	Preshipment Inspection	2	12 (0.6%)
	Administrative delay	1	
	Anti-dumping duties	1	
	Export License	6	
	Multiple exchange rate	1	
	Restrictive official foreign exchange allocation	1	

주: 1) ASEAN 사무국의 NTM Type을 토대로 재분류.

2) 관세라인의 경우 각국별 상황에 따라 최대 HS 7/8/9단위로 세분화.

자료: ASEAN 사무국(2004. 8); 홍상수(2005) 재인용.

그러나 한·ASEAN FTA에서 비관세장벽 철폐 문제에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대ASEAN 진출기업과 주요 수출업체들과 공조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별 NTB 리스트를 발굴해 구조적으로 업계의 의견을 취합하고 협상 내용을 다시 업계에 피드백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FTA 이행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업계간 담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매년 이행위원회 개최 이전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관련업체 및 유관협회를 구성원으로 하는 간담회를 개최, 구체적인 비관세장벽 사례 및 업계 애로사항을 조사·취합하여 이행위원회에서 체계적으로 의제화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업계간담회(가칭)’는 FTA 이행위원회 개최 4개월 전에 1차 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조사하고, 이행위원회 종료 이후 회의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2차 회의를 통해 주요 회의결과를 업계에 피드백하는 틀을 정착시켜 정부와 업계 간의 상호보완적 역할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조적 메커니즘이 정착되면 NTB 위원회나 분쟁해결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정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업계 간담회는 우선 철강협회, 석유화학협회, 기계협회, 자동차협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주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KIEP, KOTRA, 무역협회 등의 연구조사 능력을 활용하여 매년 비관세장벽 주요 사례를 조사·발굴하고, 유관기관과 세부적인 사례를 발굴하는 체제를 구축한다면 민간과의 연계를 통한 통상협력기반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라. 저개발국에 대한 개발협력 강화

ASEAN 국가 중에는 경제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저개발국이 상당수 있어 우리나라와의 경험관계를 고려하여 우리의 주요 무상원조 지원대상지역으로 중

점적인 지원을 받아왔다. 그런데 ASEAN과의 관계를 긴밀히 할수록 지역 혹은 국가별로 지원요청이 쇄도할 것이므로 대ASEAN 협력사업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유망지원사업을 패키지로화하여 국별 차별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표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ASEAN 회원국과 CLMV 간은 국별 경제발전단계 및 개발 격차가 크므로 국별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여 경제적 지원을 이들 CLMV 국가에 집중해야 한다.

▮ 표 5-3. 동남아 주요국의 빈곤과 인구관련 주요 지표 비교 ▮

(단위: %)

	빈곤인구 (국가빈곤선 이하)	\$1(PPP)/day 이하 인구	Gini 계수	인간개발지수 (2004년 순위, 전체 177국)	도시인구비율 (2006년)
캄보디아	34.7(2004)	18.5(2004)	0.381(2004)	129	20.0
라 오 스	32.7(2003)	28.8(2002)	0.347(2002)	133	22.0
미 안 마	26.6(2001)	---	---	130	31.0
베 트 남	19.5(2004)	8.4(2004)	0.371(2004)	109	27.0
브루나이	---	---	---	34	78.0
인도네시아	16.7(2004)	7.7(2002)	0.343(2002)	108	49.0
말레이시아	5.1(2002)	0.0(2004)	0.403(2004)	61	66.0
필 리 핀	30.0(2003)	13.2(2003)	0.440(2003)	84	63.0
싱가포르	---	---	0.425(1998)	25	100.0
태 국	9.8(2002)	0.0(2002)	0.420(2002)	74	30.0

주: ( )는 조사연도.

자료: ADB(2007).

그동안 베트남과 미얀마는 시장잠재력을 고려하여 유·무상 원조를 확대해 왔지만,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UN이 지정한 최빈개도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력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였는바, 이들 국가에 대한 보다 중점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원조규모를 보다 확대해야 할 것이다.

ASEAN 국가에 대한 무상원조는 매년 우리나라 전체 증여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1987년 유상원조가 개시된 이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지원사업도 그 비중이 약 30%에 달한다.

양허성 차관인 유상원조의 경우 주요 지원 분야는 도로, 통신, 전력, 병원건설 등이나, 현재 빈곤퇴치 문제가 국제협력의 최대 이슈로 부각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효과적인 유·무상원조를 상호연계하여 빈곤퇴치에 직접적으로 기여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개발경험 및 인력개발사업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현재 ASEAN 역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개발격차 완화 및 후발국의 경제통합 지원이므로 ASEAN 통합이니셔티브(IAI)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ASEAN은 역내 개발격차 완화를 최우선 목표로 추진 중이며, ASEAN+3 정상회의 시 IAI 협력사업 지원문제를 주요 의제로 제기하는 등, 이 사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로서는 비교우위가 있는 인력개발(HRD), IT 협력, 개발경험 지원 등에 초점을 둬으로써 지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ASEAN+3 차원에서 ASEAN 경제통합에 적극 관심을 표명하면서 ASEAN 차원의 개발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IAI 사업 추진의 경우, 저개발국 CLMV 개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발전 및 빈곤퇴치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ASEAN 역내국가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2007년까지 지원을 마친 IAI 사업 및 추가지원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저개발국에 대한 중장기 지원프로그램을 ASEAN IAI와 다각적으로 상호연계해야 할 것이다.

한편 ASEAN 사무국은 경제통합에서 가장 큰 문제점인 역내 개발격차 완화를 위해 최근 ASEAN 개발기금(ADF)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DF는 일종의 Trust Fund로서 2005년 7월 38차 ASEAN Ministerial Meeting(AMM)에서 결정되어 ASEAN의 기존 회원국이 100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고, 호주, 인도, 일본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므로 우리 정부의 지원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ASEAN 후발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FTA 추진과 연계하여 ‘ASEAN 개발이니셔티브’라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ASEAN+1 정상회의에서 제안된 경제장관회의와 고위경제관리회의와 같은 협의채널을 적

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ASEAN 측의 개발수요를 파악하고 신규 지원 가능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ASEAN 사무국과 정책대화를 강화함으로써 상호호혜적인 경험기반을 조성하고 ASEAN에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개발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제6장

## 향후 전망 및 과제



## 향후 전망 및 과제

외환위기 이전에는 동아시아지역의 유일한 지역협력체인 ASEAN이 지역주의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ASEAN은 1990년대 초반 이후 역내 경제통합을 적극 추진해왔고, 경제통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베트남, 미얀마 등 인도차이나 국가들을 신규회원국으로 가입시켜 ‘ASEAN 10’을 실현하였다. 그러나 AFTA는 회원국 간 경제력 차이가 크고, 역외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그동안 역내교역 확대보다는 외국인투자 여건의 개선을 통해 외국 자본 유치를 확대하는 데 역점을 두어왔다.

이같이 ASEAN의 경제통합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외환위기 이후 ASEAN+3 협력체제를 매개로 한 동아시아 시장통합이 가속화하고 있다. 2005년 7월 중·ASEAN FTA가 발효되는 등 ASEAN을 허브로 역내 개별국 간 FTA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동아시아 FTA에 대한 논의도 구체화되고 있다. ASEAN의 경우 아직 동아시아 차원의 FTA 추진에는 미온적이지만, 우선 AFTA를 통한 단일시장 추진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주변국과는 ASEAN+1 차원에서 협상력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산업발전단계가 낮은 후발가입국(CLMV)은 AFTA를 통한 ASEAN 회원국 간의 경제통합이 우선해야 한다는 반응이고, 동아시아 차원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에 대해서는 ASEAN 차원의 공식적 입장을 아직 구체적으로 표명하지 않고 있다.<sup>21)</sup>

ASEAN+3 지역의 경우 특징적인 것은 경제 및 무역 규모에서 동북아가 압도적이지만, 지역통합에서 ASEAN 국가들의 주도성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동아시아 역내의 상호 의존관계와 분업구조를 반영하여 기능적 시장통합을 제도화하기 위한 FTA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최근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제도화와 회원국 간 정책접근을 전제로 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출범 가능성은 아직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SEAN+3에서의 역내 지역통합과 관련하여 평가해볼 때, 앞으로 ASEAN+3 역내 국가가 향후 일정 기간 고도성장을 계속 한다면, 기존의 기능적 통합을 기반으로 역내 국가 상호간 경제관계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0~12년경에는 현재 중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역내 모든 FTA가 통합될 것이므로 ASEAN+1 FTA 추진 시 원산지규정과 같은 주요 협상쟁점을 표준화하고 규범화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역내 FTA 통합이 수월해질 것이다. 동아시아 FTA 설립은 역내에서 중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장통합을 실질적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시장통합적인 FTA 추진이 궁극적으로 회원국 간 정책 및 제도적 조정과 접근을 통해 상호경제운영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역내에서 다자지원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FTA 추진에서 많은 난제를 극복해야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AFTA는 물론 ASEAN+1 차원의 양자간 FTA는 회원국 간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에 크게 미흡하며 일종의 특혜무역협정(PTA: preferential trade aggrement)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고, 과도한 예외품목 인정으로 무역자유화의 실효성을 크게 낮추고 있다. ASEAN+1 FTA가 단계적인 관세인하에만 역점을 두고 전반적인 경제협력과 병행한 포괄적인 일반협정 체결로 귀결되면서 변형된 특혜협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ASEAN+1 차

21) 개방도가 높은 싱가포르는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고, 말레이시아도 2001년 11월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 'ASEAN+3 사무국'을 설치하자는 등 실질적인 제도적 통합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원의 FTA가 단순히 시장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동아시아 역내에서 소지역별로 분할(segmentation)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면 역내 국가들이 기대하는 이득 창출에 제한이 있게 되고, 역내에서 상대적인 차별대우가 지속되는 무역전환 효과가 커지면서 WTO 체제에 의한 다자주의에 비해 관련국들의 후생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sup>22)</sup>

이같이 ASEAN+1 차원의 FTA가 실효성이 낮고, 제도적 측면의 취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차원의 FTA 추진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 실현방안에서는 많은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ASEAN+1 차원의 FTA가 ASEAN을 매개로 횡적으로 연계되어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차원의 FTA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지만, 동북아국가 간 갈등 때문에 사실상 협상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동아시아 차원의 지역통합을 위한 주도권 경쟁에서 중·일 간의 대립과 갈등은 2005년 12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와 회원국 확대문제로 표면화된 바 있다.

이러한 중국과 일본의 대립은 그동안 동아시아 FTA 추진에서 동북아 차원의 FTA 추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논거를 취약하게 만들고, 현실적으로 정치·외교적 협조체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SEAN+3 협력 체제에서 ASEAN이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동북아 국가들 간 불화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SEAN의 기본 전략은 AFTA의 조기 실현을 통해 정치·경제적 지역협력체로서 ASEAN의 위상과 결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동북아와의 경제협력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ASEAN은 제9차 ASEAN 정상회담에서 ASEAN 공동체(ASEAN Community) 달성을 위한 「발리협약 II」에 전격 합의하고, 정치·안보,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 등 3개 부문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ASEAN 공동체를 달성한다는 목표하에 ASEAN 경제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10개 회원국 간의 경제적 수준, 문화·종교적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

22) 김세원 외(2006, pp. 90~92, pp. 131~134) 참고.

다는 현실적 측면을 존중하면서, 회원국들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여 ASEAN 경제통합 심화를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부 경제통합의 심화와 확대, 세계경제와의 연계를 통해 ASEAN 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를 목표로 1997년 발표된 ASEAN 2020 비전에 따라 경제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ASEAN 단일시장, 무관세화, 서비스 및 인적 자원 원활화의 조기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AEC에 관한 고위급 실무반(HLTF)'을 설치하여 회원국 간의 구체적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ASEAN은 협의(consultation)와 합의(consensus)에 의존한 ASEAN way라는 독특한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사실상 만장일치제와 상호 내정불간섭 원칙을 유지함으로써 낮은 단계의 지역통합체에 머물러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07년 1월 세부에서 개최된 제12차 ASEAN 정상회의에서 ASEAN 공동체(ASEAN Community) 실현목표를 2020년에서 2015년으로 앞당기고, 본격적인 지역통합을 위해 ASEAN 헌장(ASEAN Charter)을 마련키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SEAN은 현인그룹(Eminent Persons Group)이 채택한 보고서를 승인하고, 향후 지역통합체로서의 제도적 틀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규범과 주요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ASEAN 사무국은 ASEAN 경제공동체(AEC)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품 및 서비스자유화, 단일생산기지, 자본자유화, 지원 부문 활성화 등 주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경제통합을 가속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한 우선통합 분야(Priority Integration Sector)로 농업, 임업, 고무, 섬유, 자동차, 전자, 어업, 보건, E-ASEAN, 항공, 관광 등을 선정하여 단일생산기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경제통합을 확대하고 있다.

향후 ASEAN은 내부결속력을 다지면서 당분간 동아시아지역에서 FTA 허브로서 역할을 지속하면서 동아시아 FTA 추진논의와 함께 인도,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경제협력 강화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ASEAN의 FTA 추진을 계기로 역내 국가들의 경쟁적인 FTA 추진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주도권 다툼으로 확대되면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ASEAN+1 차원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확대되면서 역내 지역주의 추세가 강화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ASEAN은 역내 지역통합의 허브(hub)로서 ASEAN+1 차원의 중층적인 FTA 추진에 보다 역점을 둘 전망이다. 이를 토대로 동북아 3국은 물론 인도, CER(호주 및 뉴질랜드)과도 FTA 추진에 합의하고, ASEAN+3 정상회의와 함께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매개로 인도, 호주를 포함하는 경제협체의 외연 확대를 통해 ASEAN의 지위와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ASEAN FTA 추진은 ASEAN과의 협력기반을 제도적으로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ASEAN+1 차원의 FTA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ASEAN을 허브로 한 지역통합 구도에 한국이 안착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ASEAN과의 연대하에 향후 전개될 역내 경제통합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면서 동남아국가들과의 산업협력기반을 통해 민간부문의 진출기회 확대와 무역 창출에 역점을 둬으로써 전략적인 글로벌 통상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중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 역내 FTA가 보다 확산되면 2010년을 전후로 동아시아 FTA 추진의 움직임도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어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역내 경제통합의 움직임에 보다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기본 토대인 ASEAN과 전략적 제휴를 보다 심화·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국문 자료

- 권 율. 1999. 「일본의 동남아 진출전략과 新미야자와 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2002. 『ASEAN 산업·교역구조 분석』. 정책연구 02-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2004. 「동아시아 지역주의: ASEAN의 시각과 전략」. 『동남아시아연구』, 제14권 1호. 한국동남아학회.
- \_\_\_\_\_. 2005. 『ASEAN+3 협력체제의 성과와 정책과제』. 정책연구 05-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2006. 「ASEAN-인도 자유무역시대 추진현황과 성과」. 『동남아시아연구』, 제16권 2호. 한국동남아학회.
- \_\_\_\_\_. 2007. 「동아시아 자유무역시대(EAFTA)의 진로와 과제」. 『인도와 아세안의 새로운 만남』. 국제인도아세안학회 창립기념 학술발표회 논문집.
- 권 율·이창수. 2005.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개최배경과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5-40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세원 외. 2006.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성공조건: 제도적 접근』. 지역연구시리즈 06-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변순. 2002. 『동남아를 둘러싼 중·일 경쟁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월)
- 박영철·노조예신이치 편. 2002.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현상과 가능성』. 아연출판부.
- 배궁찬. 2003. 「중국의 대ASEAN 접근강화 동향 및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8월 22일)
- \_\_\_\_\_. 2007. 「ASEAN의 공동체 구상과 현상채택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 백영서. 2005.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창비.
- 이일영·전병유 외. 2002. 『개방화 속의 동아시아: 산업과 정책』. 한울아카데미.

- 이태왕·사토 모토히코 편. 2006. 『아시아 자유무역론』. 한울아카데미.  
 재경부. 2006~2007. 보도자료.  
 정갑영 외. 2002. 『동아시아의 정치와 경제』. 나남출판.  
 한국은행. 2005. 「최근 아시아 국가간 금융협력 진전과 향후 전망」. 『해외경제정보』, 제2005-58호. 한국은행.

• 영문 자료

- ADB. 2002. *Building on Success: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Next Ten Years of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Economic Cooperation Program*.  
 \_\_\_\_\_. 2007. *Key Indicators of Developing Asian and Pacific Countries 2007: Inequality in Asia*. Manila: ADB. (August)  
 ASEAN Secretariat. 2006. ASEAN Statistical Yearbook 2006.  
 \_\_\_\_\_. May 2005. ASEAN: Narrowing the Development Gap.  
 Furman, J. and J. E. Stiglitz. 1998. "Economic Crises: Evidence and Insights from East Asia."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vol. 2, pp. 1-136.  
 Glick, R. and A. K. Rose. 1999. "Contagion and Trade: Why Are Currency Crises Regional?"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vol. 18, pp. 603-617.  
 McKinnon, R. and G. Schnabel. 2003. *The East Asian Dollar Standard, Fear of Floating or Original Sin?* Stanford University. Mimeo.  
 Murase, T. 2004. "The East Asian Monetary Zone and the Roles of Japan, China, and Korea." Kyoto University, Mimeo.  
 Park, Y. C. and Y. Wang, 2005. "The Chiang Mai Initiative and Beyond." *The World Economy*, vol. 28, no. 1, pp. 91-101.  
 Radelet, S., J. D. Sachs, and J. W. Lee. 2001. "The Determinants and Prospects of Economic Growth in Asia."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vol. 15, pp. 1-29.

Sakakibara, E. 2003. "Asian Cooperation and the End of Pax Americana." in J. J. Teunissen and M. Teunissen eds. *Financial Stability and Growth in Emerging Economies: The Role of the Financial Sector*. The Hague: FONDAD.

World Bank an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World Development Report 2005: A Better Investment Climate for Everyone*.

World Bank. 2005.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5*. (CD-Rom)

Zhang, Yunling. December 2004. "China's Economic Rise and New Regional Growth Paradigm." Occasional Paper Series 04-04.

• 웹사이트

ASEAN Secretariat. <http://www.aseansec.org>

Asian Development Bank. <http://www.adb.org>

Global Insight. <http://www.globalinsight.com>

Goldman Sachs. 2005. "How Solid are the BRICs?" Global Economics Paper no: 134.

OECD. <http://www.oecd.org>

UNCTAD. <http://www.unctad.org>

.....

## Executive Summary

# **Korea's Mid- to Long-term Economic Strategy for the ASEAN**

Yul Kwon, Jae-Wan Cheong, and Jaeho Lee

Since the Asian Financial Crisis, ASEAN has kept accelerating the regional integration process to achieve a single production base to cope with economic crises, and it's still attempting various measures such as AFTA, AIA, AICO,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s, and other plans to magnify the benefits of market integration. With a total population of 574 million and a combined GDP of almost US\$1 trillion, ASEAN gets more attention as a major emerging market with its rapid growth, and its strategic value shows rapid growth as a group of post-BRIC economies.

As the fifth-largest trade partner and third-largest investment recipient of Korea, ASEAN has maintained a close economic relationship and it is gaining further importance as a major source of petroleum, natural ga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In addition, as the East Asia economic integration and ASEAN+1 FTA accelerate their pace, a Korea-ASEAN FTA would serve as a building block for East Asia regional integration in the near future.

As economic cooperation with ASEAN such as an FTA or regional integration increases, the Asian countries face fierce competition to take on leadership roles. Curbing the rapid growth of China, the leading economies of Japan, India, and Australia are competing with each other in order to secure the leadership for market integration and economic cooperation in East Asia. Additionally, hosting the ASEAN-centered multilateral cooperation

schemes such as the ASEAN+1, ASEAN+3, and ASEAN+6, and accelerating the FTA process with major economies, ASEAN could maintain the leading role as a hub in market integration and economic cooperation in East Asia.

As the strategic value of ASEAN as a hub for competition in order to take the leading role for the East Asia market integration and economic cooperation increases, it is urgent for a partnership with ASEAN to be established in order to get the leading role and accompanying influence for East Asia economic cooperation. There are a few priority policies to obtain a strategic partnership with ASEAN: building effective and strategic organization for Korea-ASEAN cooperation, extending industrial cooperation, removing non-tariff barriers, and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LDCs. These policies would ensure a strategic partnership with ASEAN that would determine the Korean government's economic policies for East Asia economic cooperation in the future.

Most of all, Korea needs to pursue global and strategic trade policies in order to prepare for interregional cooperation under a strategic alliance with ASEAN, and to expand investment and trade based on industrial cooperation with ASEAN members. In addition, as multilateral interregional FTAs are widening their scopes, the EAFTA is expected to be promoted around 2010. Utilizing a Korea-ASEAN FTA, which would be a building block to prepare for inter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Korea needs to widen and deepen its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ASEAN in the future.

■ 연구보고서

- 07-01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 김홍중·권 율·박복영·정성춘·이성봉 외
- 07-02 한·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 최낙균·이홍식 외
- 07-03 DDA 협상의 전개과정과 다자통상체계에 대한 시사점 / 서진교 외
- 07-04 글로벌 이웃소싱 확대에 따른 한국의 과제와 대응 / 현혜정·김혁황·김민성·박철형
- 07-05 원화국제화 추진에 따른 장단점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 송원호 외
- 07-06 한·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통상정책 방향과 과제 / 채 욱 외
- 07-07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통합모델의 모색과 한국의 전략 / 안형도·박제훈
- 07-08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 양평섭·이장규·박현정·여지나·배승빈·조현준
- 07-09 한·중 금융·물류 허브 경쟁과 한국의 선택: 빈하이 신규 확대 개발에 따른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정형곤·오용협·원동욱·나승권
- 07-10 한·일 기업의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비교 연구: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 정성춘·이형근
- 07-11 인도 산업발전 전망과 한·인도 산업협력 확대방안 / 이순철·최윤정·정재완·Prabir De
- 07-12 러시아의 WTO 가입과 한국의 무역투자 증진방안 / 이재영·채 욱·한홍렬·신현준

- 07-13 한국 경제발전경험의 대(對)개도국 적용 가능성 /  
박복영 · 채 욱 · 이재민 · 이 근 · 이상철
- 06-01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  
채 욱 · 김세원 · 유재원 외
- 06-02 사회경제정책의 조화와 합의의 도출: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정책 시사점 / 김홍중 · 신정완 · 이상호
- 06-03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 /  
권 율 · 김한성 · 박복영 · 황주성 · 홍수연
- 06-04 DDA 주요 의제별 평가와 대응전략 /  
서진교 · 송백훈 · 송영관 · 정지원 · 박지현 · 이창수
- 06-05 APEC 무역원활화의 정책과제 및 파급효과 /  
김상겸 · 박성훈 · 박인원 · 박순찬
- 06-06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 특성별 성과 분석과 정책과제 /  
이성봉 · 윤미경 · 현혜정
- 06-07 직접투자의 탈산업화에 대한 영향분석 /  
이홍식 · 강성진
- 06-08 금융허브 기반구축을 위한 파생금융시장 활성화방안 /  
오용협 · 조종화 · 윤덕룡 · 송원호 · 이호진 · 이인형 · 진 익
- 06-09 헤지펀드에 대한 주요국 규제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이호진 · 송원호 · 장국현 · 정삼영
- 06-10 중국의 비즈니스환경 변화와 외자기업의 대응전략 /  
박월라 · 박현정 · 이 근 · 은종학
- 06-11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  
이장규 · 이인구 · 여지나 · 조현준
- 06-12 일본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정성춘 · 김양희 · 이홍배 · 이형근 · 김은지
- 06-13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 전략과 한국의 참여 확대방안: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  
이재영 · 이철원 · 신현준 · Victor Kalashnikov
- 06-14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 및 현지화 전략 연구 /  
이순철 · 정재완 · 최윤정 · 오민아

■ 2007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 06-15 고유가시대의 중동경제와 대중동 경제협력 확대방안 /  
박복영 · 황주성 · 박철형
- 06-16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FTA 협상 사례와 시사점 /  
김원호 · 권기수 · 김진오 · 박수완 ·곽재성
- 06-17 지역무역협정에 따른 생산성 효과분석 /  
이홍식 · 신관호 · 이종화 · 김형주
- 07-01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  
김홍중 · 권 율 · 박복영 · 정성춘 · 이성봉 외
- 07-02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화권 /  
양평섭 · 여지나 · 박현정 · 배승빈
- 07-03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일본 /  
정성춘 · 이형근 · 김은지
- 07-04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ASEAN /  
권율 · 정재완 · 이재호
- 07-05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대양주 /  
김한성 · 배희연
- 07-06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인도 /  
이순철 · 최윤정
- 07-07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동 /  
박복영 · 박철형
- 07-08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아프리카 /  
박영호 · 허윤선
- 07-09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북미 /  
이준규 · 김종혁 · 고희재 · 오민아
- 07-10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남미 /  
권기수 · 김진오 · 박수완 · 김원호
- 07-11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EU /  
김박수 · 홍유수 · 이철원 · 김근태 · 오태현

■ 지역연구시리즈

- 07-12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 이재영·한종만·성원용·이광우
- 07-13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앙아시아 / 이재영·신현준 편저
- 07-01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 이재영·박상남
- 07-02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의 정치경제와 소프트파워 통상 전략 / 이 근
- 07-03 주요 선진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현황과 통상전략 / 최의현·김완중
- 07-04 최근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 정 훈
- 07-05 India's Economic Cooperation with Partner Countries: Current Status and Potentials / Anjan Roy
- 07-06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정책방향 / 인남식
- 07-07 아프리카 빈곤대책으로서의 농촌개발: 한국 농촌개발 경험의 전수를 중심으로 / 전승훈·허길행·유철·최미애
- 07-08 EU의 대북미 통상전략 분석 / 안덕근
- 07-09 중국의 대북미 외교안보정책과 통상전략 / 주재우·김민수
- 07-10 일본의 대북미 통상전략 분석 / 정 훈
- 07-11 차베스 에너지정책의 형성배경 및 전망 / 임배진
- 07-12 우리나라 기업의 브라질 진출 확대와 교민 활용방안 연구 / 김영철
- 07-13 페루이즘의 변천과 아르헨티나 경제모델의 평가와 전망 / 하상섭
- 07-14 볼리비아의 자원민족주의와 천연가스산업 재편 전개 / 이상현
- 07-15 주요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 한종만

■ 무역투자연구시리즈

07-16 주요국의 대중아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 박상남 · 강명구

07-01 한·중 FTA 반덤핑분야 제도 및 예상 쟁점 / 정지원 · 박혜리 · 여지나

07-02 한·중 FTA 보건의료 서비스 예상 쟁점 및 기대효과 분석 / 성한경 · 강준구 · 배승빈

07-03 한·중 FTA 지식재산권 분야의 이슈 점검 / 조미진 · 엄부영 · 박현정

■ 동북아연구시리즈 /  
CNAEC Research Series

06-01 한·중·일 FTA의 수산부문 효과와 대응방안 / 김남두

06-02 Regional Trade in Northeast Asia: Why do Trade Costs Matter? / Prabir De

06-03 Bankruptcy Procedures and the Efficiency of Corporate Debt Restructuring in Korea and Japan / Kenya Fujiwara

06-04 Analysis on the Issues of and Prospects for a China- Korea FTA / Zhang Jianping

■ KIEP-KOTRA  
유망국가산업연구

07-01 러시아의 주요 산업 / 신현준 · 이광우 · 김정훈

07-02 멕시코의 주요 산업 / 김진오 · 유성준

07-03 베트남의 주요 산업 / 정재완 · 김동현 · 박근형

07-04 브라질의 주요 산업 / 권기수 · 지윤정

07-05 알제리의 주요 산업 / 박영호 · 박범준

07-06 이집트의 주요 산업 / 박철형 · 권세영

07-07 인도의 주요 산업 / 최윤정 · 박민준 · 김정현

■ 세미나자료모음

- Africa in the World Economy /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n eds.
- Global Imbalances and the US Debt Problem:  
Should Developing Countries Support the US Dollar? /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n eds.
- Emerging Financial Risk in East Asia /  
Doo Yong Yang ed.

■ 연구자료

- 07-01 2007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 07-02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 이재영 · 박상남
- 07-03 동북아 대도시권 동태적 경쟁력의 비교연구 /  
김원배 · 안형도 · 박세훈 · 정옥주 · 이성수
- 07-04 중국의 WTO 가입 5주년 결산: 중국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중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 양평섭 · 구은아
- 07-05 Global Imbalances and Developing Countries:  
Remedies for a Failing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an eds.
- 07-06 한·뉴질랜드 경험방향과 통상전략 / 김한성 · 배희연
- 07-07 원조모형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 박복영
- 07-08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체계로서 외국인지분제한 제  
도의 실효성 검토 / 송영관 · 안준성
- 07-09 한중일 3국의 하이테크제품 교역 특징 및 수출경쟁력  
패턴 분석 / 방호경
- 07-10 미국 민주당의 경제정책방향 및 시사점 / 이준규 · 고희채

- 07-11 EU의 세계통상전략 / 김세원
- 07-12 FTA 협상 관련 한국의 전자상거래 주요 쟁점 및 대응 / 윤창인
- 06-01 의료인력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정책방향: 한·미 면허 관리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 김정곤
- 06-02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열린경제 / 강인수 · 한홍렬 · 김관호 외
- 06-03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협력경제 / 박성훈 · 박순찬 · 정재완 외
- 06-04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통상거버넌스 / 최병일 외
- 06-05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선진경제의 통상정책과 시사점 / 유진수 외
- 06-06 한·미 FTA 투자분야 주요 쟁점이슈와 평가 / 이성봉 · 김관호 · 이준규 · 현혜정

■ Working Papers

- 07-01 Determinants of Intra-FDI Inflows in East Asia: Does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ffect Intra-FDI? / Jung Sik Kim and Yonghyup Oh
- 07-02 Financial Liberalization, Crises, and Economic Growth / Inkoo Lee and Jonghyup Shin
- 07-03 The Determinants of Cross-Border M&As: the Role of Institutions and Financial Development in Gravity Model / Hea-Jung Hyun and Hyuk Hwang Kim
- 07-04 A Roadmap for East Asian Monetary Integration: The Necessary First Step / Kyung Tae Lee and Deok Ryong Yoon
- 07-05 An Empirical Assessment of a Trade-off Between FDI and Exports / Hongshik Lee and Joon Hyung Lee

- 07-06 Understanding Wage Inequality: Trade, Technology, and Location / Chul Chung and Bonggeun Kim
- 07-07 What Kinds of Countries Have More Free Trade Partner Countries?: Count Regression Analysis / Jung Hur and Backhoon Song
- 07-08 Experimental Economic Approaches on Trade Negotiations / Hankyoung Sung
- 06-01 Investment Stagnation in East Asia and Policy Implications / Hak K. Pyo
- 06-02 Does FDI Mode of Entry Matter for 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Korea / Seong-Bong Lee and Mikyung Yun
- 06-03 Regional Currency Unit in Asia: Property and Perspective / Woosik Moon, Yeongseop Rhee, and Deokryong Yoon

■ 단행본

- 차기정부 대외경제정책의 방향과 과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싱가포르 FTA의 주요내용 /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EFTA FTA의 주요 내용 / KIEP·외교통상부
- 비교방법론적 분석을 통해서 본 동북아 경제통합 / 김홍중·손병해 공편저
- 한·미 FTA 바로알기 2006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권 율(權 栗)

서강대학교 경제학 박사

미국 East West Center(EWC) 객원연구원

싱가포르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ISEAS) 객원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팀장, 동서남아팀장

(現, E-mail: ykwon@kiep.go.kr)

저서 및 논문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 방안』 (공저, 2006)

『ASEAN+3 협력체제의 성과와 정책과제』 (공저, 2005) 외

## 정재완(鄭在完)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수료

싱가포르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ISEAS) 객원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전문연구원

(現, E-mail: jwcheong@kiep.go.kr)

저서 및 논문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공저, 2006)

『ASEAN+3 협력체제의 성과와 정책과제』 (공저, 2005) 외

## 이재호(李在浩)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

태국 중앙은행(Bank of Thailand) 객원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센터 연구원

(現, E-mail: jhlee@kiep.go.kr)

저서 및 논문

「태국 정정불안의 배경과 경제적 시사점」 (2007)

「태국의 주요 FTA 추진정책과 자동차 산업전망」 (2007) 외

연구자료 07-15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ASEAN

2007년 12월 25일 인쇄

2007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李景奭**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행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178, 1179 FAX: 3460-1144

인쇄 **오름시스템(주)** 전화 2273-7011 대표 **이호열**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ISBN 978-89-322-2126-7 94320  
978-89-322-2064-2(세트)

정가 7,000원

#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개 인 회 원

연 구 자 회 원

S 발간물일체	A 반년간지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반년간) 대외경제연구	1만 5천원		1만 2천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염곡동 3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보자료실 편집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 3460-1179 FAX: 02) 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I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